

2021년도  
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 
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
(국토교통부 소관)

2022. 9.

대한민국정부

국 토 교 통 부

□ 국토교통부(326건)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기획조정실	1.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 등 국토교통부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선방 안을 검토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 국가재정법 일부개정(안) 국회 논의 중</li> <li>* 「국가재정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국회제출 (류성걸의원 대표발의, '21.6) 등 2건</li> <li>○ 철도('22.1.20)·공항('22.5.27)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정 기재부 건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AHP 가중치, 편익관련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여부 등 검토</li> </ul>
기획조정실	2.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탄소중 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물, 수송, 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「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」 발표('21.12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임대주택·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(LH),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(도로공사), 탄소중립 R&amp;D 투자 확대(KAIA)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책·사업을 집행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기획조정실	3.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산된 업무 분과를 일원화하는 등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,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소도시, 수소교통 등 관련 산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중</li> <li>* '21.11월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부터 기업성장지원팀에서 총괄하여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
기획조정실	4.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운영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종합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만, 지도감독 부처로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</li> </ul>
기획조정실	5. 산하기관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자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 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을 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관행적인 자회사로의 이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하도록 조치 요청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 이직 여부 등 모니터링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기획조정실	6.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 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를 하거나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 시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산하기관과 징계 규정 개정을 협의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‘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’와 ‘부동산 취득제한 위반’ 시 표창 등으로 인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자체 징계규정 개정 검토 요청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하 공공기관의 징계규정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관리·감독</li> </ul>
국토도시실	7.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사업을 점검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스마트그린산단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(대구울하 '22.2~12)</li> <li>○ 「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」 고시('21.12)</li> <li>○ 새만금 스마트그린 시범산단 지정('22.7)</li> </ul>
국토도시실	8.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업도시 개발사업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'을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위원에게 설명</li> </ul> <p>* “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촉진·개선 방안”</p>
국토도시실	9. 지방자치단체가 도심 융합특구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지를 제출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적절한 기준과 방향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0.9월부터 5가지 도심융합특구 선정 기준'을 既마련하여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**</li> </ul> <p>* ①혁신성장 가능성 ②핵심기관 연계성, ③교통의 편리성 ④생활여건 우수성, ⑤부지확보 용이성</p> <p>** 가이드라인 송부 및 지자체 회의('20.9)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회의('20.11)</p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10. 이순신대교의 유지·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순신 대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건설되었으나, 지방도(863호선)로 지정되었으므로, 지방도 도로관리청인 지자체가 유지·관리할 필요</li> <li>-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단 진입도로 건설 비용을 국비지원하고 있으나, 준공 이후 유지·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음</li> <li>○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유지·관리비 지원 근거 및 사례가 없어 국비지원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</li> </ul>
국토도시실	11. 각종 국토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토지표 활용도가 예상되는 중앙정부, 지자체, 국책 및 지방연구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('22.2.24~3.15)</li> <li>○ 2022년 국토조사 추진계획 마련('22.4.4)</li> <li>○ 국토모니터링 5개년 실행계획('22~'26)에 따라 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 본격 추진('22.4.19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토조사 5개년 추진계획('21~'25)에 따라 주요 수요지표 지속 발굴</li> <li>○ 국토모니터링 5개년 실행계획('22~'26)에 따라 계획 및 사업 등에 활용할 공통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 등 마련 검토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12. 도시개발사업은 「도시개발법」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률 제한 규정이 없고,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수율이 낮게 적용되어 민간사업자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환수가 어려우므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을 완료하고('21.12), 하위법령 개정 완료('22.6)</li> <li>- 민·관 공동사업 시 민간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제도화</li> <li>- 조성토지 직접사용 범위를 출자지분 내로 제한하고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도록 절차 강화</li> </ul>
국토도시실	13. 「도시개발법」에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하고, 민·관합동 개발사업에서의 시행자 수익계약을 금지하며, 「도시개발법」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발계획에 분양·임대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10%이상 변경시 도시계획촉 거치도록 함</li> <li>- 민·관 공동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요청 및 검사 권한 부여</li> </ul> <p>* 감사원 연간감사계획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임</p>
국토도시실	14.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,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할 것	
국토도시실	15.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직무감사를 실시할 것	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16.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발제한구역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유형 연구 중</li> <li>*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 연구('22.3~'23.1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완료 후 관계기관,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검토</li> </ul>
국토도시실	17.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이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,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체 예산 확대 중</li> <li>* 1,570억원('20)→1,613억원('21)→1,613억원('22)</li> <li>- 이 중 토지매수 예산도 지속 증가</li> <li>* 550억원('20)→594억원('21)→622억원('22)</li> <li>○ 향후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여 보전부담금징수액과 GB 관련 예산배정금액과의 차이를 해소하고, 토지매수예산을 상향토록 노력</li> </ul>
국토도시실	18. 도시재생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,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공급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차별 실적행률 등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실적평가 등 성과와 연동한 23년 예산편성 추진</li> <li>* 교부 전 지자체 의견조회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나, 민원, 부지미확보, 코로나로 인한 SW사업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적행 저조</li> <li>○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·변경 시 사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추진중(「도시재생법」 제20조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19. 집행 속도가 느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선정 시,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및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'21년 신규사업 87곳 선정</li> <li>○ 매월 전체 사업지(496곳)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시도 간담회 등으로 밀착 사업관리 중</li> <li>* 미흡사업 비율 대폭 감소('20.6월 24% → '22.6월 9.5%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의 집행 전망을 파악하여 수시로 사업별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집행 제고 예정</li> </ul>
국토도시실	20.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발굴하고,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있어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사고 대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·관 공동 SPC를 설립하여 사업 추진 기반 마련(5월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시범도시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 승인 등 조속 추진</li> <li>- 실시계획 수립·승인 시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 도입 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·보안 대책 등 검토·반영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21.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「건축법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서 제외하고,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토지형질 변경 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단독 설치방안 및 법령 개정안 검토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령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('22.9~)</li> <li>○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('23.10 예정)</li> </ul>
국토도시실	22. 도시재생 씨앗용자 관련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씨앗용자 사업장 정밀점검 실시('21.11월)</li> <li>* 준공사업장(216개) 중 용자 필수요건(부적절 업종 제한 등) 위반사례 없음</li> <li>○ 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수립('21.12월)</li> <li>- 사업계획 대비 운영업종 상이 사업장(35개)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 이행요구 조치</li> <li>* 35개 중 14개는 '22.3월 이행요구 조치완료, 21개는 조치 중</li> <li>- 시정조치 이행여부 및 사업장별 사업계획 준수 현황을 정기(분기별)적으로 점검·보고</li> <li>○ 사업계획 준수 및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장 및 사고관리지침 개정('22.4월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23.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업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준공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*에 따라 준공시설 운영관리계획 수립 여부 점검 및 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준공시설 사업관리 체계 구축 중('22.9월중)</li> <li>* 준공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/HUG'21.5월-'22.2월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준공시설 사업관리 체계 구축 및 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사업관리</li> </ul>
국토도시실	24.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의 유형으로 인정함으로써 주택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(21.10.14)</li> <li>-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* 한시적(21.10.14~23.10.14.) 완화 적용</li> <li>* 전용출입구, 바닥난방, 발코니 기준 등</li> </ul>
국토도시실	25.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분양 및 입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용도분류 체계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가 건축법상 용도체계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, 지자체 등에 협조 요청('21.10)</li> <li>○ 아울러, 개별입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허용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 진행 중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26. 녹색건축물 인증 후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증 건축물에 대한 부실인증 여부를 조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증 취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(2.94억원) 확보 및 착수 진행('22.6~12월)</li> <li>○ 제도 운영기관과 함께 약 50건의 실태 조사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현장 조사 예정('22.下)</li> </ul>
국토도시실	27.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성, 물량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대상 유형 확대를 예산당국과 사전 협의 완료</li> <li>○ '23년에 도서관, 경로당, 파출소 등으로 대상 유형 확대 및 예산 증액 기재부 협의(정부안 반영 完)</li> </ul>
국토도시실	28.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이자지원사업 활성화, 민간건축물 지원방식 다각화 등 기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「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('21.12월)」을 수립하였으며,</li> <li>- 관련하여 세제혜택·기금활용,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, 이자지원사업 개선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착수·검토 중</li> <li>* '21.9~'22.9, 한국환경건축연구원(7.5천만원) 등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29. 불법건축물 건축주와 불법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단속·처벌하는 방안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 폐지로 인한 민원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법령으로 불법행위자인 건축주(건축법 제108조)와 불법 건축물 임을 숨긴 채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 (공인중개법제25조·제33조제1항제4호)</li> <li>○ 아울러,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의 위반유형과 범위 및 위반시기 등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(최대50%범위)이 가능</li> </ul> <p>* 단, 이행강제금 제도 취지는 의무이행을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시정 또는 납부의 면제 등의 예외규정은 신중검토가 필요</p>
국토도시실	30.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정안전부에 위반건축물 감독관 인력 확보를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을 요청하였으며, '22년 지자체 기준인건비에 인력(36명)이 우선 반영('21.12월)</li> </ul>
국토도시실	31. 불법건축자재 단속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의 공백이 생기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시행 주체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건축법」 제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정하여 불법건축자재 신고센터 상시 운영 중('21.10월 ~)</li> </ul> <p>* 2022년 이후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불법건축자재 단속 지속 중</p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32. 인구 수 외에도 지역 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인구 수 외에 건축허가 면적과 노후 건축물 비율 상위 30% 이내 시·군·구까지 확대하는 「건축법」 일부개정 완료('22.6.10. 공포, '22.6.11. 시행)</li> </ul> <p>* 개정 시 89개 지자체가 추가 설치대상에 포함</p>
국토도시실	33.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국고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실집행률 향상</li> <li>○ 본예산 실집행률 ('20년) 17.4% → ('21년) 51.8%</li> </ul> <p>* (추진실적)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·클리닉, 지자체 점검회의, 현장모니터링, 예산 집행절차 단축, 행정절차 지원, 매뉴얼 및 가이드북 제작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·배포, 사업대상자 맨투맨 홍보, 관련 협회 협조, 성과 공유 현판 제작·설치 추진</p>

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34. 지역아동센터 중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하는 센터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이유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아동센터 중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('22.3.23.)</li> <li>- 지역아동센터의 용도 변경(폐지) 등에 따라 305개소 → 232개소로 축소</li> <li>○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와 LH(사업관리 업무위탁기관)와 협력하여 임대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</li> <li>○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임대인 피해 최소화 협조 요청('22.7.12, 국토부→지자체·LH)</li> </ul>
국토도시실	35.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시설의 성능검증과 관련하여 기술 안정성·피난성능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검증방법의 개선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체 시설의 성능검증을 전문기관(한국건설기술연구원)의 구조·설계·방재·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검증으로 개선</li> <li>* 건축법 시행령 개정('21.8.) 및 시행('21.9.)</li> <li>- 신기술 적용 등 추가적인 기술검증 방법 또는 제도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 예정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36.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2조, 제22조, 제30조와 관련하여 2015년 법 제정 이후 추진실적이 미미하므로,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2차 「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」('21~'25) 수립을 통해 그간의 미비점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既 마련('20.12월)</li> <li>- 한옥의 대중화·산업화를 위해 '09년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옥 기술 R&amp;D 사업(국비 381억)을 단계별로 추진</li> <li>* 한옥 기술의 개발(구축시공법, 유형, 거주성능 개선, 표준품셈, 설계자동화 프로그램, 대공간 한옥의 설계·시공 기술 등) 및 실증 구축(수원 한옥기술전시관 등 7개소)</li> <li>- 대학, 협회, 교육원,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7년간('11~'14,'19~'21)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(공모 선정)을 통해 1,142명 수료</li> <li>* '21년(4.8억원), '22년(4.8억원), '23년(4.8억원)</li> <li>-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 및 시·도지사의 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 협조 요청('22.5, 조례에 따라 지원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 추진</li> <li>- '22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건축자산 유지 보수 과정 시범운영 추진</li> <li>*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준 마련 연구용역비 확보예정('23년)</li> <li>* 기준마련 용역 완료 후, 민간보조 예산 편성을 위한 기재부와 협의 필요</li> <li>-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지자체 대상으로 기반시설 등 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적극협의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37. 총괄·공공건축가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·감독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소통을 위한 간담회 2회('21.10월/12월) 실시</li> <li>○ 회계연도말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'22년 지원대상지 선정부터 당초 4월에서 전년 12월로 조정하여 4개월 단축('21.12월)</li> <li>○ '22년 지원사업부터 교부예정금액의 50%를 1차 교부('22.1월)하고, 6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차 교부('22.6월)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</li> </ul>
국토도시실	38. 「공공건축특별법」 등 총괄·공공건축가 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현장에서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작년 두 차례 및 올해 법안소위('21.2.18, '21.6.15, '22.5.18)에서 총괄·공공건축가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하여 제정안을 보완 완료</li> <li>-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명칭을 변경*, 정의조항의 신설, 자격, 업무범위, 보수 등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체계에 맞도록 구성</li> <li>* 총괄건축가 → 공공건축 총괄계획가 /공공건축가 → 공공건축 공공계획가</li> </ul>
국토도시실	39.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구용역의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1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 및 선정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함('22.1월)</li> <li>- '22년 정책연구용역도 조기에 과제선정('22.1월) 및 발주('22.3월)하여 연내 준공 예정('22.12월)임.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40.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등에 분양가상한제,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동산 시장 안정, 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50%를 출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 적용을 받도록 「주택법」 개정완료('21.12.21.)</li> </ul>
주택토지실	41.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·감독 장치를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,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개정안 발의('21.4, 조용천 의원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,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이행</li> </ul>
주택토지실	42. 청약 당시에는 대출이 가능했으나,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·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당국과 함께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 협의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부처 협의 후 방안 마련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43.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·과장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문적인 용역을 추진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수립('21.9월)</li> <li>-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현장조사 및 지자체 간담회 개최('21.10월)</li> <li>○ 주택조합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추진(용역기간 : '21.11.18 ~ '22.5.17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조합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 마련(~'22.12월)</li> </ul>
주택토지실	44. 세종시 청약 공급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복도시 일반공급 청약제도 개선안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('21.11)</li> <li>○ 행복도시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조정(50%→60%) 완료('22.2)</li> </ul> <p>* 「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」 개정 완료('22.2.21, 행복청)</p>
주택토지실	45. 부적격당첨자 감소 방안 등 청약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적격당첨자 발생사유·유형 분석 및 부적격 감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</li> <li>- 일반공급 가점제 무주택기간 입력 절차, 지역선택 안내 등 청약신청시스템 개선</li> <li>- 청약제한사항, 청약가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'청약자격 진단' 서비스 신설</li> </ul> <p>* (부적격당첨자 비율 추세) : '19년 11.3% → '20년 9.5% → '21년 8.9% → '22. 7월 7.7%</p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46.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정리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관추천 특별공급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 등 개선방안 검토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유형 정비 등 검토</li> </ul>
주택토지실	47. 세종시 이전기관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등으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」 관련 감사원 실질감사('22.2~'22.3) 등</li> <li>○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계약취소 조치 요청('22.7) 및 주택법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('22.9)</li> </ul>
주택토지실	48. 국내 대기업 직원들에게도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관추천 특별공급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 등 개선방안 검토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유형 정비 등 검토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49.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공급한 아파트에 대해 무순위청약 과정에서 주택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,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,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출</li> <li>* 분양자로 요구 근거 미약, 강제조사 권한 없음</li> <li>- 다만,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, 우리부와 3차례에 걸쳐 수사 관련 질의회신(주택법령해석)</li> <li>* (1차) '22.1.19., (2차) '22.2.17., (3차) '22.3.21.</li> </ul>
주택토지실	50. 나쁜 임대인,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블랙리스트 등의 정보 공개를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법안*이 상임위 소위 계류 중</li> <li>* ❶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(소병훈 의원, '21.5.6) :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인 정보를 공개</li> <li>❷ 「주택도시보증법」 개정안(김상훈 의원, '21.9.24) :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,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개정 및 운영방안 등 마련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51.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리스크 관리리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지도·감독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HUG 고분양가사업장 심사규정 개정('21.9)* 및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지침 개정('22.3)**</li> <li>* 심사방식 계량화, 지역 평균분양가 반영 등</li> <li>** 지역여건, 주택경기 등을 고려하여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</li> </ul>
주택토지실	52.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독점으로 인해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각각 있으므로,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시장 상황 및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검토 결과에 따라 주택분양보증 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</li> </ul>
주택토지실	53. 부동산 통계 생산 체계 고도화 및 빅데이터 기반의 주택시장 분석·예측시스템 개발에 대해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R&amp;D를 통해 주택시장 분석 기능 시스템 개발 완료</li> <li>* 「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」('16.8~'22.2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54.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립·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율(시세 대비 전세가) 축소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립·다세대 주택의 주택가격 과다산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가격 산정기준 요건 개선(HUG 보증규정 개정, '21.10)</li> <li>○ 또한, '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('22.9.1)'을 통해 주택가격 산정체계 개선 발표</li> <li>*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활용하고, 공시가 적용 비율은 개선(150% → 140%)</li> </ul>
주택토지실	55.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적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* 및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대출 상품 안내 서비스 도입('21.9)</li> <li>*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개선</li> <li>○ 디딤돌대출 한도 5천만원 상향('22.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기존) 2.0억원 → (개선) 2.5억원('22.1.1.시행)</li> </ul> </li> <li>○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운영기한 연장('22.1)</li> <li>* (당초) '21년 종료 → (변경) '23년 종료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56. 임차인 대항력 강화, 신고제 확대시행 등 임차인 보호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발간('21.12),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 실시('22.6) 등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 강화</li> <li>○ 임대차 신고제 정보 시범공개('21.11)로 임차인·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임차인 협상력 제고</li> </ul>
주택토지실	57.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분석 및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개정 검토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개정안 마련('22.下)</li> </ul>
주택토지실	58. 반지하층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침수 우려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'20년부터 선제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상향사업 추진 중</li> <li>* (반지하 거주자 지원실적) '20년 80호 → '21년 1,056호완</li> <li>- 향후에도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안정적 주거지속 제공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59. 국토교통부가 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거급여 지급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, 추가확대를 위해 관계부처(기재부 등)와 지속적으로 협의 할 계획</li> </ul> <p>* (주거급여 상향) '21. 중위소득 45 → '22. 46% (기준임대로 현실화) '21. 95 → '22. 100%</p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안정적 추진 및 확대 노력 지속</li> </ul>
주택토지실	60. 국토교통부가 주택매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·현직자 주택 매입 원천 제외, 외부심의위원 확대 등 「매입절차 투명성 강화 방안」 시행('21.9)</li> </ul>
주택토지실	61.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 등 사회적 주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('22.5~, 건축공간연구원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('22.下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62.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, 전세시세 대비 정부 지원한도가 낮아 주택 물색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한도 인상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증금 지원한도를 인상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'22년 지원한도를 일부 인상(일반유형 수도권, 1.1억→1.2억)하였으며, 추가적인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.</li> <li>- 그 외에도 주택물색 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주택정보를 제공하는 전세임대뱅크 활성화 및 민간 협업을 통해 주택물색을 지원하도록 하겠음</li> </ul>
주택토지실	63. 여수시 웅천동 부영 2차·3차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수 웅천 부영 2차·3차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착수('21.12.7, 한국부동산원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당성조사 결과 회신 등 후속조치 (~'22.6월)</li> </ul>
주택토지실	64.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재부와 기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2년 본 예산에 공공자가주택 공급관련 예산반영 완료</li> </ul> <p>* 지원수준 : 호당 90~110백만원 지원(450억)</p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65. 일부 신혼희망타운에 거주 의무가 미적용되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, 이를 개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주택건설대지와 생활환경이 유사한 인근지역* 주택과의 매매가격을 비교하여 적정 거주 의무가 적용되도록 제도 운영 중</li> <li>* (인근지역 우선순위) ① 구·읍·면·동 → ② 시·군·구 전체 → ③ 인근 시·군·구</li> <li>- LH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(외부위원 포함)에서 인근지역 선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</li> </ul>
주택토지실	66.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 총자산기준 도입 등 관련 연구 과제* 선정 및 용역 진행 중</li> <li>* 총자산기준 도입 적합성(타당성) 검토 등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용역 종료('22.12 예정) 후 용역 결과 및 서울시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「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」 개정 추진('23. 상반기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67. 청년과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미임대율이 8.2% 정도 되므로, 소형평수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재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형 임대주택(전용 60㎡ 이상) 0.1만호를 최초 인허가 완료('21.12)하였음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향후에도 중형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며,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수요*를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</li> <li>* 1~2인 가구와 최저소득계층 등을 위한 적정 평형 공급도 감안할 필요</li> </ul>
주택토지실	68. 건설임대 소형평수가 공실률을 높이고 있으므로, 중대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형 임대주택(전용 60㎡ 이상) 0.1만호를 최초 인허가 완료('21.12)하였음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향후에도 중형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며,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수요*를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</li> <li>* 1~2인 가구와 최저소득계층 등을 위한 적정 평형 공급도 감안할 필요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69. 주거지원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수요 계층별 새로운 목표 산정 시, 고령자 수요의 확대를 감안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그간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라 <b>무장애 설계 주택</b>과 <b>복지서비스</b>를 함께 제공하는 <b>고령자복지주택</b> 등 고령자 주거 지원을 추진해왔음</li> <li>* '18~'21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4.3만호 공급 완료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고령자 주거지원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령자복지주택 등 <b>고령자 특화주택</b> 지속 공급, 24시간 <b>스마트 돌봄서비스</b>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지원을 추진하겠음</li> </ul> </li> </ul>
주택토지실	70. 부채비율이 100%를 초과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0%까지만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채비율 100% 초과자*에 대한 임대보증금 특별보증 상품(주택도시보증공사) 한시적 운영('22.1.15.~'24.1.14.) 시행</li> <li>* 보증 의무('20.8.) 전 등록된 개인임대사업자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71. 울산야음공원은 울산 석유화학공단 공해차단독지로 도심의 허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개발이 아닌 공원 조성이 필요하고, 울산 강동공원은 해안가 지역의 보존상태가 우수한 지역으로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공원 조성이 필요하므로,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울산야음 공급촉진지구 : 장기미집행 공원실효에 대비해 공원보전과 주택개발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주민·환경단체·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중</li> <li>○ 울산강동 공급촉진지구 : 울산시가 인근 강동관광단지* 조성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(조망권 침해 등) 등을 우려하고 있어, 울산시와 다각적인 주택공급방안 협의중</li> <li>* (강동관광단지) 울산시 산하동 일원 1,367천㎡ 관광테마파크 조성('05~'23년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 및 관계기관, 주민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</li> </ul>
주택토지실	72.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 및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말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법안 발의(소병훈 의원, '21.5)되어 개정 진행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정 완료 시 렌트홈(임대등록시스템) 등과 연계하여 명단공개 및 보증금 관리 강화</li> </ul>

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토지실	73.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임대등록 시스템(렌트홈) 고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·국세청 등과 연계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등록임대주택 소유권 정보 확인 등을 위해 대법원 등기시스템 연계 완료('21.12)</li> <li>○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청 및 지방세 시스템 등 연계 중임</li> <li>○ 향후에도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겠음</li> </ul>
주택 토지실	74.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최초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한 경우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최초 임대료를 한국부동산원·KB 시세 등을 통해 모니터링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대료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임대가 심사 제도 등을 통해 지속 점검 추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										
주택 토지실	75. 공공택지에 대한 민간 매각 최소화, 토지비축은행 설립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지구에서는 공공임대 35%이상, 공공분양 25% 이하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, 실제 평균적으로 공공주택을 51% 수준으로 공급 중임.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사업지구 수</th> <th>공공주택 비율</th> <th>공공 임대</th> <th>공공 분양</th> <th>민간 주택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7곳</td> <td>59%</td> <td>39%</td> <td>20%</td> <td>4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적정비율을 검토하여 추진</li> </ul>	사업지구 수	공공주택 비율	공공 임대	공공 분양	민간 주택비율	77곳	59%	39%	20%	41%
사업지구 수	공공주택 비율	공공 임대	공공 분양	민간 주택비율								
77곳	59%	39%	20%	41%								
	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지은행은 「공공토지비축법」에 따라 2009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</li> <li>○ 토지은행의 당초 수립 목적 달성과 신규 토지비축 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, 규모 확대 등 공공토지비축 활성화 방안 마련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공공토지비축법」 개정안 발의</li> </ul>										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76.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, 페이퍼컴퍼니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사하고,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의 페이퍼컴퍼니 단속권한 확대를 위한 관계 법률(주택법, 건설산업기본법) 개정안 발의 완료('21.11)</li> <li>○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(LH 택지공급계약서 개정) 완료('22.4)</li> <li>○ 택지공급 시 IP당 1회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LH 청약시스템 개선 완료('22.1)</li> <li>○ 택지를 공급받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벌떼입찰 여부 조사 진행 중('22.2~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벌떼입찰 조사 완료</li> </ul>
주택토지실	77. 미성년자가 주택 구매 시 불법 또는 편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검증 강화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0년 3월부터 '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을 포함한 의심거래를 다수 적발(3,787건) 하였음('22.3)</li> <li>-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78.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, 개발이익 환수 미비 등 제도적 불비점 보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검으로 국민 불신 해소 필요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동산 시장 안정, 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50%를 출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「주택법」 개정 완료('21.12.21.)</li> </ul> <p>&lt; 조치실적 : 조치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을 완료하고('21.12), 하위법령 개정 추진중('22.6예정)</li> <li>- 민·관 공동사업 시 민간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제도화</li> <li>- 조성토지 직접사용 범위를 출자지분 내로 제한하고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도록 절차 강화</li> <li>- 개발계획에 분양·임대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10% 이상 변경시 도시계획특 거치도록 함</li> <li>- 민·관 공동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요청 및 검사 권한 부여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중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토지실	79. 설계공모, 공사입찰, 물품·지급자재 구매, 임대주택 매입 등의 결정을 위한 심사 시 내부직원을 배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에 대해 업체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재검토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LH 혁신 TF 확대 개편 및 이행관리 체계 수립('22.6.3)</li> <li>- 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·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·논의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혁신방안 이행 현황 점검 및 추가보완 방안 검토</li> <li>* TF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(법령, LH 내부규정 등 개정) 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토지실	80.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경영평가 시 반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의무기간만 채우고 퇴사시키는 행태를 관리·감독할 것	<p><b>[한국토지주택공사]</b></p> <p><b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2년 LH 신입사원 정규직 채용 시 「장애인고용법」 상 의무비율('22년 3.6%)의 2배 이상 장애인 구분 모집('22.4월, 7.2%)</li> <li>* (채용결과) 총 263명 중 장애인 12명(4.56%)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차별없이 안정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입사원 정규직 채용 시 장애인 채용 확대 지속 추진</li> </ul> <p><b>[한국부동산원]</b></p> <p><b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부동산원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 채용 확대</li> <li>- (한국부동산원) '22년 신입직원(정규직) 채용시 장애인 구분 모집 추진('22.9월)</li> <li>* (채용목표) 총 33.5명 중 장애인 3명(8%)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관 자체 연도별 장애인 정규직 고용 목표 수립 및 이행 여부 관리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81. 내부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제도 및 규정을 잘 관리해 나갈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LH 혁신 TF 확대 개편 및 이행관리 체계 수립('22.6.3)</li> <li>-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조사, 투기·감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</li> </ul>
주택토지실	82.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을 조직개편 방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의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둔 장기적 혁신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LH 혁신 TF 확대 개편 및 이행관리 체계 수립('22.6.3)</li> <li>-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지속 추진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문용역 추진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('22년말)</li> <li>- 부동산 시장 상황, LH 인사·노무·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·진단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83. 인력 감축, 업무 이관, 전직원 재산등록, 취업제한 확대 등 징벌적 성격의 조직개편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재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LH 혁신 TF 확대 개편 및 이행관리 체계 수립('22.6.3)</li> <li>-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지속 추진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문용역 추진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('22년말)</li> <li>- 부동산 시장 상황, LH 인사·노무·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·진단</li> </ul>
주택토지실	84.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, 전자계약 이용 의무화 및 프롭테크 업계의 시스템 활용 등 다각적 방안을 고려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프롭테크 업계 등 민간부문 전자계약 활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기능개발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안부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비대면 대출서비스 발굴 등 소비자 편의성 증대시켜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</li> <li>○ 금리혜택, 실거래신고 자동신청 등 인센티브 지속 제공 및 확대방안 마련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85.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동산 허위·과장광고의 금지와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·시행('20.8.21.)</li> <li>- 법 시행 이후 분기별 모니터링과 취약 분야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6,245건의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하였음</li> </ul> <p>* (분기별 모니터링) 5,507건, (기획조사) 738건</p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음</li> </ul>
주택토지실	86. 프롭테크 업계와 중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개업 및 프롭테크 업계 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·운영</li> </ul> <p>* 킥오프 회의 실시('22.1.11)</p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탄력적 회의 운영으로 업계간 상생방안 마련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87. 임대차 계약 만기 전 임차인 중도퇴실 시 주체별 적정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차인 중도 퇴실 시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안내 및 홍보 강화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관기관, 중개사협회 등에 임대차 중도 퇴실 시 중개보수 부담 주체 및 특약 사항 설정 등 안내</li> </ul>
주택토지실	88. 실제 불법행위자인 건축주와 불법 건축물임 을 숨긴 채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를 단속 및 처벌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토부·지자체 합동점검 추진</li> <li>-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 의무 위반 등 위법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사무소 점검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토부·지자체 합동점검 계획 수립('22.7)</li> </ul>
주택토지실	89.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진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동산 중개업계 - 프롭테크업계 간 상생방안 마련</li> <li>- 중개업계 경쟁력 제고, 신산업 육성 등 업계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·운영('22.1)</li> </ul> <p>* 업계·학계·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 업계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논의</p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2차 협의체 회의 개최('22.5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90. 부동산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상한액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을 위한 현실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질적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 * (개인) 1억 → 2억, (법인) 2억 → 4억</li> </ul>
주택토지실	91. 사모리츠의 감축 필요성을 검토하고, 공모 리츠·앵커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모·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 발표('22.1.12, 국토부·금융위·공정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모리츠 인가절차 간소화 및 리츠 투자자산(연금저축 투자허용) 다양화 등</li> <li>- 앵커리츠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자범위 확대</li> <li>- 상장리츠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등</li> </ul> </li> <li>* 법령 개정사항은 '22년 내 추진 예정</li> </ul>
주택토지실	92. 리츠시장 성장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리츠 관련 조직·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하고, 금융위원회와의 업무중복을 해소하는 한편,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정규 협의체를 운영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모·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 발표('22.1.12, 국토부·금융위·공정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모리츠 인가절차 간소화</li> </ul> </li> <li>○ 한국부동산원 리츠 관련 조직 확대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리츠심사단(10명) → 리츠심사부(14명), 금융전문가 채용 추진, 인가 신청 제출 자료 표준화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「부동산서비스정책위원회」를 통해 세제 혜택, 제도개선 등 협의 추진 * (위원장) 국토부장관, (위원) 기재부·행안부·금융위 등 관계부처 차관, 각계 전문가 등 17인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93. 일반 국민이 리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지표, 리츠지수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고,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모·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 발표('22.1.12, 국토부·금융위·공정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하여 일반 투자자 접근성 향상 추진</li> </ul> </li> <li>○ 기존 자산·임차현황, 배당수익률 등 공개정보 외 투자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 발굴 및 공개 추진</li> <li>○ 투자지표 집계·발표 중인 민간기관에도 유용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고 공개할 계획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시행 (2022년 착수 ~ 2024년 준공)</li> <li>○ 공개정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(업계, 학계, 전문기관 등)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(수시)</li> </ul>
주택토지실	94. 리츠 인가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모·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 발표('22.1.12, 국토부·금융위·공정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모리츠 인가절차 간소화</li> </ul> </li> <li>○ 한국부동산원 리츠 관련 조직 확대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리츠심사단(10명) → 리츠심사부(14명), 금융전문가 채용 추진, 인가 신청 제출 자료 표준화 등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95.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여 담합행위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개정안 발의('21.4, 조응천 의원), 국회 계류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,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이행</li> </ul>
주택토지실	96.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'을 실시하고, 모니터링 결과 인증기준 위반 의심 사업자 대상 수시점검 실시</li> <li>* 인증 홈페이지 불편신고 접수내용, 인증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</li> </ul>
주택토지실	97.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정성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업무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를 제척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부위 위원인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</li> <li>- '22년 표준지공시지가 안건 심의 시 제척('22.1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98. 성남 판교대장지구 보상과 관련한 세 개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정평가서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, 평가 방법 및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</li> <li>* 해당 의원실 방문 설명</li> </ul>
주택토지실	99.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회부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회부기준(안) 관련 관계기관 협의('22.3월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당성조사 회부기준 마련(5월중)</li> </ul>
주택토지실	100.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개편안을 2022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정평가사 1·2차 시험 응시수수료 분리징수 내용을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반영하여 개정 완료('22.1.21.시행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'22.12월 공고될 '23년 시험부터 분리징수 적용 예정</li> <li>* 감정평가법령에 따라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시행 공고(응시수수료 사항 포함)를 하여야 함</li> <li>** '22년 시험은 위 시행령 개정시행 이전 공고('21.12월)되어 개정 전 내용으로 적용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101. 편법증여 및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개정안 발의('21.4, 조응천 의원), 국회 계류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,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이행</li> </ul>
주택토지실	102. 객관적인 산업 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사회적 이익률을 기초로 부동산 개발사업자에게 적정 이익을 보장하고,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·관 공동사업시 민간이익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상한 제도화(「도시개발법」 개정, '21.12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발부담금 관련 법률은 국회 계류 중이므로 국회 논의를 거쳐 조치</li> </ul>
주택토지실	103. 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및 통계관리를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가분담금을 낮춰 원주민 재정착을 제고할 수 있도록,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* 마련 중</li> </ul> <p>* 도시규제 완화, 공적주택 범위·비율 조정 등</p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도개선 내용 반영한 도시정비법 개정('22년下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104.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, 감면사업 정비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안 발의('21.11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국회 논의를 거쳐 조치</li> </ul>
주택토지실	105.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2년 공동주택가격(안) 열람 시 관계부처(기재부, 행안부, 복지부 등) 합동으로 부담완화방안' 발표</li> </ul> <p>*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산정시 '21년 공시가격 활용 등</p>
주택토지실	106.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구축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인 주택보유 데이터 구축 및 통계 생산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* 추진중</li> </ul> <p>* 「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방안 마련 연구」('22~'22월)</p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인 주택보유 데이터 구축 및 통계 생산 추진('23.1분기)</li> </ul>

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107. 재건축사업에 대한 민간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기관의 안전진단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매뉴얼 설명 및 부실사례 전파 등 교육 실시(3회)</li> <li>* 안전진단전문기관 : '21.10.29, '22.4.15 지자체 : '21.12.8</li> <li>-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력 향상 및 안전진단 부실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계획(반기별 1회)</li> </ul>
주택토지실	108.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고,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운영을 철저히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적처리기간 준수를 위해 '22년에 <b>조사 인력을 증원[3명, (당초)37명→40명]</b>하고, 신청사건 처리 과정을 전산화(전자우편, 모바일 사용 등) 하는 <b>하자관리정보 시스템도 전면 개선 완료</b>('22.4.11.)</li> <li>* 인력 확충에 대해 예산당국과 지속 협의예정 ['23년 6명 증원 요청, (현재)40명 → 46명]</li> <li>○ 사무국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소속직원 <b>인사발령 시</b> (3.16) 전입자에 대한 전공분야, 직급 등에 대해 <b>국토부와 사전협의</b>(3.11)하는 등 인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</li> </ul>
주택토지실	109. 감정평가 3인 추천 제도 및 보상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상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법령 개정</li> <li>- 감정평가 전문분야 관리, 평가사 징계 정보공개, 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('22.1.21.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10. 줄어 들지 않는 건설 근로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실시공 근절방안(3.28) 등 대책 발표를 통해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 중</li> <li>- 다만, 규제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</li> </ul>
건설정책국	111.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중장기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실시공 근절방안(3.28) 등 대책 발표를 통해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 중</li> <li>- 다만, 규제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</li> </ul>
건설정책국	112.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고조사위 운영은 사고의 중대성과 사고조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*</li> <li>* (前 사조위원장) 원인이 명확한 경우 사고 조사 필요성은 높지 않으며, 무분별한 사조위 운영 시 오히려 사고현장 수습이 늦어질 우려</li> <li>○ 다만, 사조위 구성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해 모든 중대건설사고에 대해 초기 현장 조사는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중</li> <li>*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1조 개정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개정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13. 건설사고 발생 후 사고신고 및 사후조사결과 제출이 미흡하므로,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복지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 간 MOU 체결(6.9)을 통해 신고 정보를 공유하여 신고율 개선 추진</li> <li>- 2차 미신고 기관은 매주 공문 시행하여 신고 요청 지속</li> </ul>
건설정책국	114. 건설 안전장비의 규격이 여성 건설노동자에게는 맞지 아니하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성 건설노동자 안전장비 사이즈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인 고용부에 의견 전달</li> <li>- 안전관련 관계부처 회의('21.10.7) 시 고용부에 해당내용 검토를 요청하였고, 고용부 담당부서*에도 개선 건의</li> </ul> <p>* (담당부서)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(044-202-8857)</p>
건설정책국	115. 동일한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처분 결과 차이가 상이하거나 결과 미회신 또는 미처분 종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 건설안전제도의 공정한 운영 및 현장관리 철저 공문 시행(1.4, 2.7)</li> <li>- 또한, 매 반기별 행정처분등 제도 이행현황을 조사·관리할 계획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16.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	<p>&lt;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전관리계획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 등 관리 철저 중이며,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('22.11~'23.2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기대비 등 현장점검 지속 추진</li> <li>○ 안전관리계획서 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개선 추진(~'23년)</li> </ul>
건설정책국	117. 광주붕괴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도로 발전시키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을 강화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지보수공사 고도화 추진</li> <li>-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 전문화를 위해 「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」을 개정('21.11)하여 신축공사와 구분되는 유지보수공사 별도 신설</li> <li>- '22.1.1.부터 유지보수 실적관리 기관을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일원화하고, 세부 공종별로 세분화 하여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별도로 관리 중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18. 국토안전관리원이 종합적인 안전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상의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폭넓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선 등 방안 검토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도개선안 마련 후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</li> </ul>
건설정책국	119.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득 몰수,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를 위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 추진('21.8~)</li> <li>* 장경태·허영·김희재 의원 개정안 발의('21.9)</li> <li>-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('22.5) 후 계류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추진</li> <li>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 후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추진</li> </ul>
건설정책국	120.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건설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도급대금 미지급,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센터 법정화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완료('22.2 건산법 시행령 개정, '22.8 시행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21. 최근 5년간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3,000여건, 등록말소가 2만여건에 이르고 있는데,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건설업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신규 및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한 교육*을 강화토록 독려(11.25)하고, 공문 시달(12.21)</li> <li>* (시기)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(8시간이상) (내용) 건설사업자 윤리경영, 관련법규, 대업종화,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</li> </ul>
건설정책국	122. 모터카의 제작년도 등을 속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 등 철도·궤도공사사업의 부정등록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도·궤도공사사업의 필요장비(모터카) 부정등록 근절을 위해 「철도안전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시행령 개정 추진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시행령 개정·시행('22.12)</li> </ul>
건설정책국	123.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, 실무협의체 상시운영,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범부처 합동 「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」을 마련하여 발표('22.3.31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24.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및 장비사업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시스템을 확산하는 등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대금의 중간 유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·지급의무를 법제화('22.1월)하고, 세부시행방안 고시 제정('22.7)</li> <li>○ 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하여 자재·장비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*하고, 임금, 자재·장비대금 중간 인출 방지기능을 통해 직접지급 효과 구현 완료</li> </ul> <p>* 하도금지킴이('21.1월), 체불e제로('21.1월), 클린페이('20.4월), 강원대금알림e('20.9월),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('20.4월)</p>
건설정책국	125.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시행 후 실제 지급내역이 2건에 불과한데, 임금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국토청과 산하기관에 직접지급시스템을 전면도입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주자 직접지급제 안내를 입찰공고서·계약조건에 명시토록 하고, 계약 시 직접지급 합의를 적극 권장토록 조치 완료('21.1)</li> <li>○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기능을 추가('22.2)하는 등 발주자 직접지급체계 확립</li> </ul>
건설정책국	126.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구분 청구·지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노무비 지급률을 제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스템을 통한 노무비 구분청구·지급 의무화('22.1) 이후 구분청구·지급 실태 점검 실시('22.上), 반기별 지속 점검 예정</li> </ul> <p>* 임금 구분청구·지급 비중은 '20년, 9.8% → '21년, 10.0%로 소폭 상승</p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27.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면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설치한 '건설기계 임대료채납신고센터'에서 체불금 회수를 지원하고 있음</li> </ul> <p>* 건설기계협회 내에 건설기계임대료채납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하여 운영('14. 1~)</p>
건설정책국	128.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하자보수 결과 등록률이 저조하여 미등록 사건의 하자보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, 등록률 개선 등을 통한 하자보수 이행률을 제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보수결과 등록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('21.12.)</li> </ul> <p>* 지자체 등에 하자보수결과 등록 지도·감독 및 필요조치 협조 요청('21.10.25.)</p>
건설정책국	129.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권내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하자판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보수결과 등록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('21.12.)</li> </ul> <p>* 지자체 등에 하자보수결과 등록 지도·감독 및 필요조치 협조 요청('21.10.25.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1.1월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, 시·도지사의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운영을 통해 발견된 하자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전(전유부분은 입주 전)까지 보수하도록 「주택법」도 개정함('20.1월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30. 건설사에 대한 시공 능력평가 시 시공 품질이나 하자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공능력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(발주, '22.6)중으로 용역 과업에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추진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등 건설현장 품질 및 하자관리 철저</li> </ul>
건설정책국	131.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지역 건설공사의 하자보수가 적기에 실시되도록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개 지방국토청에 국도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관리 철저 지시하고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설물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정, 기간 내 검사 실시 및 하자 발견시 건설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시행</li> </ul> </li> </ul> <p>* 도로건설과-3454호(2021.11.9.)</p>
건설정책국	132.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후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전문 건설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수주 불균형 해소, 공정경쟁 여건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·보완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세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역개편 보완방안 마련('22.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.5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* 국토부-업계(건협·전협·기협)간 합의(5.30)</p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33. 건설산업 업역개편 후 종합·전문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율을 조정하고, 제대로된 직접시공 여부 점검 및 직접시공계획서 DB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호시장 진출비율 조정을 위한 업역개편 보완방안 마련('22.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.5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</li> </ul> </li> <li>* 국토부-업계(건협·전협·기협)간 합의(5.30)</li> <li>○ 직접시공여부 점검 등 의심업체 적발 조치 강화 계획 서면답변제출('21.10.2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호시장 진출공사 직접시공 원칙 준수 여부 특별 실태점검('21.11.15~12.20)</li> </ul> </li> </ul>
건설정책국	134.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재등록검사를 금지하고, 등록말소와 함께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여 부적합한 기계를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'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사용·운행을 제한하고, 위반 시 과태료 부과</li> </ul> <p>* '22.2.3 개정, '22.8.4 시행</p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35. 규격에 맞지 않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, 모든 소형 타워크레인이 규격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9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후 9차례 논의 끝에 소형 T/C 조종사 자격기준을 마련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·시행('21.7)</li> <li>- 현장에서 기준에 부합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, 신고센터도 운영 중</li> </ul>
건설정책국	136. 시정조치(리콜) 명령이 내려진 타워크레인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'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(리콜) 명령이 내려진 타워크레인은 사용·운행 제한 가능</li> <li>* '22.2.3 개정, '22.8.4 시행</li> </ul>
건설정책국	137. 타워크레인 불법 구조변경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대행기관들로 하여금 불법 구조변경을 막도록 조치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8년 이후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 (1,181대)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</li> <li>* (조사기간) '21.11 ~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조변경의 절차와 허용범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 추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38. 불법 구조변경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노조를 포함한 민·관·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8년 이후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 (1,181대)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</li> <li>* (조사기간) '21. 11 ~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조변경의 절차와 허용범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 과정에서 노조를 포함한 민·관·정 의견을 반영하여 수렴</li> </ul>
건설정책국	139.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내 신고센터가 신고 접수 후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기검사 미수검·안전기준 부적합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·운행중지 명령 도입 (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, '22.8.4 시행)</li> </ul>
건설정책국	140.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, 준정부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혁신방안('21.12) 및 추진실적 지속 관리·감독 중</li> <li>* 검사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, 경영 혁신 및 공익성 강화 등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41. 적정한 검사 원가를 반영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연구 용역 중(~'22.6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유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추진</li> </ul>
건설정책국	142.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 시 품질 검사를 요구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기술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추진중 (규제심사 진행중, 9.6~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시 개정 완료('22.12월)</li> </ul>
건설정책국	143.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특정 공법 심의 시 신기술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기술에 가점(3점)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「건설신기술 활성화방안」 마련(9.8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국토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('22.11월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44. 건설신기술 보유자뿐만 아니라 신기술 사용 협약자도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상 정부 입찰공사는 신기술사용협약자도 참여 가능 (기재부 유권해석, '20.2.21.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이 개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(행안부)와 지속 협의</li> </ul>
건설정책국	145. 각 부처별 신기술 인증 분야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신기술 분야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 부처 소관 신기술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지정 및 활용되고 있으므로, 개선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 추진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기술 관계부처 간 협의 지속 추진</li> </ul>
건설정책국	146. 충분한 검증을 거친 건설신기술을 특정공법 심의대상에 우선적으로 상정하고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기술에 가점(3점) 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(60%→80%) 등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「건설신기술 활성화방안」 마련(9.8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국토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('22.11월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47. 매년 건설신기술 지정 공법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, 건설신기술 개발자에게 특허와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기술에 가점(3점) 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(60%→80%), 공고부문 우수 신기술 적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건설신기술 활성화방안」 마련(9.8)</li> </ul>
건설정책국	148.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 시 배점기준과 관련하여 초기 설계·시공 비용의 절감(15점)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(5점)의 기준이 낮아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배점기준을 변경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'21.10.14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설계·시공비 절감'과 '유지관리비 절감'을 동일점수(5점)로 변경하고, '공사기간 단축(5점)'을 신설하는 등 심사기준 배점 변경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49. 건설신기술의 기술범위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신기술 제도를 활성화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'19.12)에 해당내용 既 반영 및 적용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조정신청 범위확대) 조정신청을 당초 1회에서 3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조정신청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범위조정 신청 시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내용 심의 및 의결 시행</li> <li>- (절차간소화) 연장심사 시 필수절차인 현장실사는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
건설정책국	150. 감리업체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받고도 다수 공사를 수주하고 있고, 소송 제도를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 하고 있어 벌점제도를 개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제도는 벌점을 부과 받아도 평균으로 산정하는 방식(벌점의 합/점검한 건설공사 수)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와, 일부 모호한 벌점 기준 등으로 인한 소송 문제가 있었으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정방식*과 모호한 측정기준**을 개선하여 '23년부터 적용되도록 벌점제도 개정 완료</li> </ul> </li> </ul> <p>* 합산벌점 : (해당반기의 벌점의 합-반기별 경감점수)/2</p> <p>** "1 또는 2점"은 "2점" 등으로, 모호한 용어·기준은 삭제하는 등 명확하게 개선</p>

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51. '無사망사고 벌점 경감' 제도가 건설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미적용되고, 설계와 CM(Construction Management)이 별도 업무임에도 벌점을 일괄적용하여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현행 벌점제도를 개선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無 사망사고 벌점 경감제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적용하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(~'22.12월 예정)</li> <li>○ 다만, 건진법에 따른 Eng업역에 대해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벌점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, 업계가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동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한 것으로,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벌점을 구분 적용하는 것은 업계 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어 중장기 검토 필요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無 사망사고 벌점 경감제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도입 관련 제도개선(~'22.12월 예정)</li> <li>○ 건설Eng 업체 대상 벌점제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제도개선을 중장기 검토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52. 공공기관이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90%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'를 추진 중(환경부 협조)에 있으며,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</li> <li>* 순환골재 품질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품질개선 없이 의무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 발생 우려</li> <li>**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발의('21.4, 박대수 의원)</li> <li>○ 아울러, 순환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'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'를 보다 강화된 'KS인증'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·추진 중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폐기물법 개정 후, 전문기관의 품질 검사 의무화 및 이물질 혼합 방지를 위한 순환골재 보관기준 마련 등 추진</li> <li>○ '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'를 'KS인증'으로 통합하여,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 유도</li> </ul>
건설정책국	153.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외건설 근로자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지원 방안 마련('21.12, 대외경제장관회의)</li> <li>- 정부간 협력을 통한 수주지원, 투자개발 사업 수주 전환 등 추진 중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54. 해외건설수주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해외건설수주 실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('21.12, 대외경제장관회의)</li> <li>- 비대면 의료서비스* 등도 지속 지원 중</li> <li>* 건설기업-의료기관(13개) 매칭, 화상상담 등 370여건 지원('20년~)</li> <li>○ 재외국민보호 실무매뉴얼 개정('21.12)</li> <li>- 해외건설근로자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체계, 상황별 대응계획 등 마련</li> <li>* 「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」 既마련('20.5)</li> </ul>
건설정책국	155. 건설공제조합이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으로 보이는데,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산법령 개정으로 공제조합 관리 감독 강화 취지에 맞게 건설공제조합 정관을 개정하여 감독강화 조치('21.12)</li> <li>- 단일 후보자도 투표로 선임여부 결정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합의 운영위 소집 전에 회의자료를 국토부에 제출 및 운영위원회 안건·절차 등 관리 감독 철저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56. 건설공제조합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대한 건설협회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초 운영위에서 예산만 심의·의결 하였으나, 시행령 개정으로 결산도 포함하여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 강화 조치('21.4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영위에서 예산·결산 심의를 면밀히 살피고, 예비비 지출도 운영위원회 승인 후 집행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</li> </ul>
건설정책국	157.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추가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)에서도 감점을 받고 있는데, 사업자에 대한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중복 행정제재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(8.16)되어 국회에서 논의 예정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58.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자의 부주의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 개인의 일탈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처벌받는 등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양벌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법행위 예방 등 양벌규정 도입취지에 위배될 수 있으며, 양벌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他 법률과도 함께 고려될 필요</li> <li>- 식품위생법, 건축법, 의료법, 중대재해법 등 총 361개 법률에서 거의 동일한 문구로 양벌규정 적용중</li> <li>* 국회 법제실 자료 (“현재결과와 법제”, '20.2.28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유사 법률들과 종합적으로 검토</li> </ul>
건설정책국	159. 건설기술 진흥법상 영업정지의 과징금 대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은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, 동 시행령의 과징금 금지조항을 개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엔지니어링 영업정지의 과징금을 대체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(8.16)되어 국회에서 논의 예정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60.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직접경비를 정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협회 의견 수렴 중(9월)</li> <li>* 발주청별 정산방법 수집 조회 등 검토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(직접경비 정산규정 명확화 등)</li> <li>- 직접경비 정산 가이드라인 배포</li> </ul>
건설정책국	161.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건설업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, 건설업에 특화된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와 병행하여 운영 필요</li> <li>- 다만, 산업안전보건법과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고, 필요시 제도 개선하겠음</li> </ul>
건설정책국	162. 건설사업자간 소송에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척기간(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또는 5년 경과 시 행정처분 불가)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 통보 및 조치 현황 전수조사 실시</li> <li>* (조사기간) '21.11 ~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반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도래로 행정처분 불가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 마련위해 관련기관,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63. 집회·시위 등 건설현장에서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갈등해소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무하므로, 동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·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('19.7, 건설협회 등에 설치)를 대신하여 일원화된 신고 기관인 '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'를 '21년11월부터 국토교통부(건설산업과)에 구축·운영하고 있으며, 동 센터로 접수되는 사건은 처분권한이 있는 관계기관'에 조사·처분을 요청 중</li> <li>* 경찰청(협박, 업무방해 등 형법 위반사항), 고용부(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 위반사항), 공정위(건설장비 사용 강요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항)</li> </ul>
교통물류실	164.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 자원 조달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 자원 조달방식 적절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</li> <li>-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, 향후 사업 재원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 등</li> <li>*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업무협약 변경 추진(물류정책과-4198, '21.11.25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65. 2017년 1월 교통안전공단이 계약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1단계 사업 계약 해지의 적절성과 이에 대한 정산 등 사업자 보호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통안전공단의 "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사업 용역 정산 계획('20.12)"에 따라 정산 완료</li> <li>- 적정 정산내역 산출을 위해 원가용역, 자문위원회 등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 정산금 지급('21.1~10)</li> <li>* 1단계 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 관련 김희국 의원실 요구자료 제출 및 방문설명 등 완료('21.8~'22.2)</li> </ul>
교통물류실	166.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 대상 확대 가능여부 등 방안 검토</li> </ul>
교통물류실	167.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일정 톤수 이상 수소화물차를 구매하여 배송업무 등의 판매·배송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영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등 방안 검토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68. 수수료 불법공제, 부대조항 위반 등 안전운임제 미준수 사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2. 4월에 국토부·지자체 합동으로 1회 점검(인천)을 실시하였고, '22년 1월부터 5월까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중 371건을 관할 관청에 이관하여 검토 중에 있음</li> </ul>
교통물류실	169. 화주 측 대표가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1.11월부터 화주측 대표로 무역협회, 대한상회가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하여 '22년 적용 안전운임 확정 고시('22.2.18) 하였음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70. 현행 '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'을 구체화하고, 국토교통부, 경찰청, 지자체 등 분산된 단속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구체화 완료 (화물차법 시행규칙 개정, '22.1.28.)</li> <li>- 화물차의 적재화물 결속 등 이탈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 및 이행 조치</li> <li>○ 적재 불량 단속원 부족에 따라 '과적 단속원' 및 '자동차안전단속원'을 지도·단속원으로 권한부여 등 인력확충 (화물차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'22.1.28.)</li> <li>○ 다만, 단속체계 일원화는 조직 신설 및 인력 확보 선행 필요 등 관계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사실상 추진 곤란</li> <li>- 이에,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의 지도·단속으로 대체할 계획(6월~10월)</li> <li>○ <b>1차 합동</b> 지도·단속 실시(6~7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토관리청·경찰청·지자체·교통안전공단·도로공사 참여 합동 지도단속 실시(6회)</li> <li>- 점검은 고속도로IC·휴게소·졸음쉼터와 일반국도 과적검문소에서 실시</li> <li>※ 9~10월 중 <b>2차 합동 지도·점검</b> 예정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기관 합동 지도·단속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차(6월~7월), 2차(9월~10월)</li> <li>* 국토관리청, 경찰청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도로공사, 민자도로사업자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71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주선수수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여 과다수수료 부과행태를 방지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선수수로 상한제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발의되어 있으나, 신중히 검토할 필요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선수수로 관련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</li> </ul>
교통물류실	172. 화물정보망 알선구조 문제로 야기되는 운임체불, 과적, 불법적 행위 및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계가 참여하는 “화물운수업계 협의체”를 구성하여 화물정보망을 통한 불법행위 관리를 위한 방안 논의중('22.4~)</li> <li>* (참여자) 국토교통부(물류산업과장), 일반·개인 중대형·개인소형 화물운송사업연합회, 화물운송주선사업연합회, 화물연대</li> <li>- 화물정보망의 법적 성격에 대해 업계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('22.6), 결과에 따라 향후 방안 논의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물정보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, 이에 따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업계와 지속 논의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73. 화물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로의 설치 및 시설물 관리는 「도로법」에 따른 각 도로관리청(국토부, 시·도, 시·군·구)이 주관하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설치 후 신호등 및 안전표지판 등 각종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경찰청이 주관</li> </ul> </li> <li>○ 이런 상황 고려, 화물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선정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협조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또한,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파악하더라도 위험구역 지정 및 운행제한 법령 부재</li> </ul> </li> <li>○ 이에,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고다발지역을 파악한 후 경찰청에 안전표지판 설치 협조요청 대체 필요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물차 사고다발지역 자료요청(7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고다발지역 선정 및 감속 등 안전표지판 설치 요청(12월)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74.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대한 정부예산 확대,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ESG 경영평가 반영, 정부 주도 기술개발사업에 IT기업 참여 독려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스마트물류센터 지원 확대를 위하여 '21년 대비 '22년 예산을 19억 증액하여 총 126.9억 편성</li> <li>- 아울러,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에너지 사용 관리, 온실가스배출 관리, 폐기물 재활용 등 친환경 관리요소를 평가하여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 결정</li> <li>- 한편, '21년부터 7년간 「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·인프라 혁신 R&amp;D 사업('21~'27, 1,248억원)」을 통해 국산 첨단 물류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, 동 사업에 다수의 IT기업, 물류·유통 사업자, 제조사 및 학교·연구기관 등 참여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 운영('21~) 및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·인프라 혁신 R&amp;D 사업 지속 추진('21~'27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																								
교통물류실	175.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보완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전조치·보험·표준계약서 등 종사자 보호 등 내용을 담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인증제 시행 중('22.2월~)</li> <li>- 다만, 인증 신청은 업계 자율에 따른 것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님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종사자 보호 의무 부과 등 업종 관리 강화를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등록제 도입 용역 추진 검토('22.하~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교통물류실	176. 테슬라 모델3 자동차 안전도평가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안전성 미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 부는 테슬라측에 개선조치를 요청하였으며, 테슬라측에서 개선 후 재시험한 결과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('21.12)</li> <li>* 재시험 후 비상자동제동장치에 대한 점수 상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획득점수</th> </tr> <tr> <th>1차('21.4)</th> <th>재시험('21.12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차대차</td> <td>(고속모드)</td> <td>2.64</td> <td>3.00</td> </tr> <tr> <td>(시가지모드)</td> <td>3.00</td> <td>3.00</td> </tr> <tr> <td>차대사람(보행자감지모드)</td> <td></td> <td>2.35</td> <td>2.76</td> </tr> <tr> <td>차대자전거(자전거감지모드)</td> <td></td> <td>0.90</td> <td>1.93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</td> <td>8.89</td> <td>10.6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획득점수		1차('21.4)	재시험('21.12)	차대차	(고속모드)	2.64	3.00	(시가지모드)	3.00	3.00	차대사람(보행자감지모드)		2.35	2.76	차대자전거(자전거감지모드)		0.90	1.93	계		8.89	10.69
구분	획득점수																									
	1차('21.4)	재시험('21.12)																								
차대차	(고속모드)	2.64	3.00																							
	(시가지모드)	3.00	3.00																							
차대사람(보행자감지모드)		2.35	2.76																							
차대자전거(자전거감지모드)		0.90	1.93																							
계		8.89	10.69																							
교통물류실	177. 자동차 하자 수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작자 등이 자동차 판매 시 하자수리 이력을 미 고지하는 경우, 2년 이내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요구 가능,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(100만원→1,000만원)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('21.11)</li> <li>* 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정('22.4.25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78.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 화재 결함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신속히 작성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전압 배터리 교체 리콜 시행('21.3.29~) 이후 리콜 시정율은 90.7%(22,754대/26,699대, '22.4.24 기준)</li> <li>○ KATRI에서 해당 리콜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코나 전기차 화재 모니터링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KATRI에서 코나EV 리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완료 후 결과보고</li> </ul>
교통물류실	179. 전기차 배터리 관련 결함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결함조사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·전자장치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전문인력 증원 방안 기재부 협의('21.7)</li> <li>-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·전자장치 전문인력 증원 2명 반영(지속 확대 추진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안전연구원 직제시행세칙 개정('21.12)하여 인력 증원 사항 반영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80. 자동차 리콜 대상 소비자에게 차량 보증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하는 등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2년 예산을 확보하여 「과징금 부과 리콜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연구 용역」 발주('22.4)</li> <li>* (과업내용) 리콜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 및 소비자를 위한 보상 방안 마련 등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('22.5)</li> <li>○ 용역 수행('22.5~'22.10)</li> <li>○ 용역 결과보고('22.10)</li> </ul>
교통물류실	181. LTE-V2X 통신방식에 대한 실증을 조속히 완료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기부와 공동작업반을 구성('21.8)하여 LTE-V2X 실증 추진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험계획 수립(~'22.5), 도로시험(~'22.9)을 거쳐 실증결과 도출(~'22.10)</li> </ul>
교통물류실	182. 자율주행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율주행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 추진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('22~)</li> </ul>

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83. 자동차 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승용차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비상자동 제동장치 설치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등 의무화 추진('21.12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절차 진행</li> <li>* 입법예고('22.2.22~4.23) → 규제심사 진행 중</li> </ul>
교통물류실	184. 이륜차 소음문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부와 협의하여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('22.2)</li> <li>* 환경부에서는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배기소음을 강화(105dB이하→95dB이하)하는 법령 개정 추진 중</li> </ul>
교통물류실	185. 이륜차 불법 튜닝에 대한 점검, 소음 피해 처벌 강화, 소음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개조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('21.10)</li> <li>* 환경부에서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배기소음을 강화(105dB이하→95dB이하)하는 법령개정 추진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륜차 불법 튜닝 등 불법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86.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인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 방안 검토</li> <li>*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 관련 용역 착수('22.4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</li> </ul>
교통물류실	187.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고차 인터넷 표시·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</li> <li>* 소병훈의원('21.6), 발의안 본회의 통과('21.5.29)</li> </ul>
교통물류실	188. 불법운행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때 보조대 파손방지 대책을 마련하고, 불법운행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 번호판 보조대 파손방지를 위한 탈거 방법 지자체 배포('22.5)</li> <li>○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시, 기관 간 불법 차량정보 공유체계 마련 방안 검토</li> <li>*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방안(선행 분석) 용역 완료('22.4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발주('22.7.~)</li> <li>* 지자체, 경찰청, 도로공사 등에서 제공된 정보를 취합 및 제공(과태료, 체납일 등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89. 자동차정비업의 ‘일 자리전환’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 패러다임의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정비 장비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* 마련(‘21.8)</li> <li>* 혁신성장 BIC3 대책 발표 시 반영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정비업계에 전기차 정비 장비 지원 및 전환 교육 등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</li> </ul>
교통물류실	190. 자동차 정기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범용 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교통안전공단에 검사결과를 전송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교통안전공단*에서 범용 판정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(‘22.1)</li> <li>* 각 검사 장비에 제작사의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제작사의 프로그램 변경 필요</li> <li>○ 검사결과 전송은 검사관리시스템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과 검사판정프로그램으로 전송하여 검사결과 적합 여부 판정 후 검사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2가지 방식 병행 운영 중</li> </ul>
교통물류실	191. 자동차제작사는 직영사업소 서비스가 확대가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영사업소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 제작사가 정비업자에게 기술지도·교육 및 자료제공 등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(‘22.5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작사의 정비교육 및 정비자료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92. 자동차 민간검사소 (지정정비사업자) 부실검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 강화*(‘21.4) 및 검사소 합동특별점검(연2회) 실시**</li> <li>* 검사사업자(재지정 금지 2년→5년), 검사원(재선임 금지 6개월→1년)</li> <li>** ‘21년도 총 363곳 점검결과 62곳을 적발하여 업무정지 62곳 및 직무정지 58명 행정처분</li> <li>- 부실검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* 및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한 자동차 검사역량평가** 제도 도입·운영</li> <li>* ‘21년 민간검사소 1,564곳 대상으로 31만대를 점검하여 438곳 컨설팅 및 지도점검</li> <li>** 차량당 2~3개의 검사부적합 항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검사소의 발견여부를 평가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간검사소 상시모니터링, 검사역량평가 및 합동특별점검 지속 추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93. 인천-서울간 M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M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지자체 수요 조사('22.3~4월)를 실시하였으며, 제출된 수요 중 여객법령 등 미충족 노선 등에 대하여 보완 추진('22.5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천시에서 신설 건의한 노선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 등 추진 중('22.5~)이며,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 신설 여부를 확정할 계획</li> </ul>
교통물류실	194. 과도한 감차로 인해 열악한 택시 이용환경을 감안하여 총량제 지침의 탄력적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완료 ('22.1.27.)</li> </ul>
교통물류실	195.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독과점 관련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, 공정위에서 일부 업체의 콜몰아주기 관련 독과점 실태조사 등을 진행</li> </ul>
교통물류실	196. 가맹택시 수수료 부과체계의 법제화를 통한 가맹점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플랫폼가맹사업 수수료 부과체계 관련하여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공정위 소관) 개정안이 논의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안 심사 대응(정무위원회 소관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97.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관련 특정업체의 독과점 문제 해결 및 공정경쟁 시장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, 지자체의 택시 호출 공앱 사업추진을 적극 독려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독과점 문제 해결 및 공정경쟁 시장 조성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*, 논의 중</li> <li>* 진성준 의원안('22.2 발의) 등 4건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향후 법안 심사 대응</li> </ul>
교통물류실	198.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내 업종 간 겸업 금지 및 운송플랫폼의 중개 및 배차 정보의 취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운수사업 업종 간의 겸업도 금지되어 있지 않고 있어 운송플랫폼사업 내 겸업 금지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</li> <li>○ 정책수립, 이용자의 교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운수사업자에게 정보를 취합하는 근거는 여객법에 이미 존재하며, - 그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·배차 정보의 취합은 사업자의 과도한 경영권의 침해 여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 필요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해관계자·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 논의 추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99.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 4자 협의체 구성 및 플랫폼사업자-택시업계 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승 의원실 주관으로 구축 예정이며, 개최 시기 등은 논의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원실과 논의하여 추후 협의체 구축 및 키포회의 등 실시 예정</li> </ul>
교통물류실	200. 여객자동차법 외의 법률에 근거한 정 부지원금 부정수급, 불공정담합, 국세·지방세 체납 등에 따른 타 부처 행정처 분도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경영·서비스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2년도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경영·서비스 평가 시 반영 예정('22.12)</li> </ul>
교통물류실	201.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, 공공기관 통근 노선을 우선 제공받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버스 기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*, 협동조합 운영,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방안 지속 발굴·추진 중</li> </ul> <p>* '21년도, '22년도 4차례에 걸쳐 총 2,100억원 지원(3.5만명)</p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02. 전세버스 시장 정상화 및 지입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을 통해 과잉 공급 해소 등 시장 정상화 노력</li> <li>- 전세버스 운행정보신고·운행기록증 기재 항목을 확대하여 운행정보 투명화 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'22.6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버스 수급조절 성과분석용역('12.7~'12.12)을 통한 수급조절 정책 검토</li> <li>* 현재 4차 수급조절정책 시행중('20.12~'22.11)</li> </ul>
교통물류실	203.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 현장조사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통안전법 개정 후 현장 조사인력 및 예산 증액 추진 예정</li> <li>- 도로외 구역인 대학 캠퍼스 교통안전 실태점검 등에 대한 교통안전법 개정안 심사 중(안규백의원 발의, '21.9.8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통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 후, 캠퍼스 점검 시행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증액 추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04. 자율주행차의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율주행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 관리체계 구축 추진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('22.1~)</li> </ul>
교통물류실	205.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택시 차령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령제도의 개선은 택시운송서비스 품질, 환경 및 승객 안전에 미치는 영향, 지역별 특성,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해관계자·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 논의 추진</li> </ul>
교통물류실	206.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육성 방안을 강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벽지노선 지원사업 관리강화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*으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하고, * (주요내용) 보조사업자 점검횟수 강화(1회→2회), 지원대상 운행횟수 기준 완화(10회/일→15회/일) 등</li> <li>- '22년 농촌형·도시형교통모델 운영지침을 동시 정비하여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육성 제도기반 강화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07. 도로망 구축사업 진행시 교통약자 및 보행약자 이동성 강화 위해 스마트 기술과 연계된 활용도 높은 세심한 초기계획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('21.9),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('21.11) 마련 시 교통약자 및 보행약자의 이동성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음</li> </ul>
교통물류실	208. 저상버스, 시각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점자블록, 특별교통수단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 등 노력을 강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통약자법 개정('22.1월)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, '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50% 증액하였음(727억→1091억)</li> <li>○ 또한, 매년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해 점자블록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음</li> </ul>
교통물류실	209. 국토부 차원의 저상버스 관리 및 유지 실태 점검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시 저상버스 경사판 작동여부 등 저상버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관리현황을 조사중에 있음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 협의, 연구용역* 등을 통해 지침 마련 검토</li> <li>*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, 여객시설 개선연구(6월 중 입찰공고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10. 특별교통수단 보급·운영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위해 '22년 예산을 전년대비 50% 증액(48억→94억)</li> <li>○ 또한,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교통약자법 개정, '22.1월)</li> </ul>
교통물류실	211.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제고 및 지역간 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위해 '22년 예산을 전년대비 50% 증액(48억→94억)</li> <li>* '21년 보급률 83.4% → '21년 보급률 86.0%</li> <li>○ 지역간 이용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교통약자법 개정, '22.1월)하였으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진행중인 연구용역'을 통해 운영비 지원 방안·규모를 산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'23년 예산(안)에 반영할 예정</li> </ul> </li> <li>* 교통약자 제도개선연구, '224~12 한국교통안전공단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'23년 예산에 반영하고,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정비('23.7월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12.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들을 위한 교통 대책을 수립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도 개발제한구역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벽지노선,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 등을 검토하겠음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진행중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음</li> </ul>
교통물류실	213.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(소병훈의원 발의, '21.8.18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통안전법 개정 후 추진</li> </ul>
교통물류실	214. 「교통약자법」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지정 관련 사업을 행안부로 완전히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2년부터 행안부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15.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대체부품 구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개선대책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체부품 인증제도 홍보 카드뉴스 및 웹툰 제작·배포('21.9월),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증대체부품 소비·유통 확대 협력체계* 구축('21.10)</li> <li>* 경기도, 자동차부품협회,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, 소비자단체협의회, 경기도택시운송조합, KD운송그룹, 자동차카페연합 등</li> <li>○ 부품협회 누리집/모바일 앱에서 소비자가 쉽게 대체부품 조회, 온라인 구매까지 가능도록 시스템 개선('21.11)</li> <li>* 부품협회 홈페이지 및 자동차 종합정보 포털(자동차 365)에 대체부품 온라인 구매 사이트(KAPA 스토어) 연동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품목 다변화, 보험상품 개발, 홍보 등 지속 추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16. 국산차에 비해 과도한 공임을 받는 수입차에 대해 표준공임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시간당 공임* 조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준비 중</li> <li>* 업계간 협상에 의해 공임 수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'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'가 마련되었으며, 이에 따라 표준공임 공표제는 '20.3월 폐지</li> <li>- 현재 합리적인 시간당 공임 조정방안 도출을 위하여 양 업계와 협의하여 관련 연구용역 준비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간당 공임 조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* 및 관련업계 협의 지속</li> <li>* 연구용역을 통해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등이 도출되는 산식 마련 추진(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용역 착수일정 협의 중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17. 현재 고시된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반사 성능 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져 있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를 국토부가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나온것에 대한 사과와 입장을 표명할 것	<p><b>[방안 마련]</b></p> <p><b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반사 성능이 높은 필름을 개발한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·성능검사, 단속카메라 인식 여부 검사 시행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 중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필름제작 업체에서 반사 성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반사 성능 기준값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음</li> </ul> <p><b>[입장 표명]</b></p> <p><b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관련으로 수사 의뢰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유감 표명을 하였음('21.12.17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18.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승 의원실 주관으로 구축 예정이며, 개최 시기 등은 지속 논의 중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원실과 논의하여 추후 협의체 구축 및 킥오프회의 등 실시 예정</li> </ul>
항공정책실	219.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길이 설계 시 기후변화 반영 설계를 검토하고,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 노력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및 활주로 표고, 온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</li> <li>-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('22.4.29) 후 후속 행정절차* 추진 중</li> <li>* 사업계획 적정성검토(기재부)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(국토부) 등</li> </ul>
항공정책실	220.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산불진화용 헬기의 기령제한을 검토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헬기 기령 제한 타당성 검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('21.12.17)</li> <li>- 기령 제한 보다는 운영방식 관리가 실효적(소방·산림청, 연구기관 등)</li> <li>○ 간담회 결과 설명('22.5.3, 위원실)</li> </ul>

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21.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조속한 기업결합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, 대한항공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할 운임정책 등 사회적 책무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2. 2월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하였고,</li> <li>- 항공사 통합계획 PMI('21.6)에 인위적 구조조정, 과도한 운임인상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업결합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·감독하겠음</li> </ul>
항공정책실	222. 항공사 통합 관련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하여 운수권·슬롯 확충, LCC에 재배분 등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류되었던 항공 회담 적극 추진 및 슬롯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공사 통합을 위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진행중, 심사 진행상황 면밀히 모니터링</li> </ul>
항공정책실	223. 국토교통부 내에 항공사 통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·항공사·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정위·해외 경쟁당국 심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 내 TF를 구성하여 운영중('21.1월~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24. 국책금융 지원을 받는 항공사업자의 자구노력을 검증·관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라 재무구조 상시 모니터링 실시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무구조 상시 모니터링 및 필요시 행정지도·재무구조 개선명령 실시</li> </ul>
항공정책실	225. 항공사 합병 관련 운임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하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2. 2월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하였고,</li> <li>- 항공사 통합계획 PMI('21.6)에 인위적 구조조정, 과도한 운임인상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업결합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·감독</li> </ul>
항공정책실	226.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제도 개선대책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객실승무원,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중(계속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객실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, 근무시간 기준 등 개정 추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27. 객실승무원의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객실승무원,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중(계속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객실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, 근무시간 기준 등 개정 추진</li> </ul>
항공정책실	228.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서울 서남권 경제도약의 거점으로 조성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('21.12)하였으며, 현재 공공기관 타당성 재조사 절차 진행 중('22.3~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당성 재조사 이후 영향평가, 설계 등 각종 인허가 수행 예정</li> </ul>
항공정책실	229. ICAO 장애물제한표면 개정안 발효 이후 국내 적용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ICAO는 장애물제한표면 국제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</li> <li>* 일정 : TF 구성('15년) → TF 초안 마련 및 항행위원회 제출('22년) → 항행위원회 검토·체약국 의견수렴 후 발효('24년) → 각 체약국 적용('26년)</li> <li>- 정부는 ICAO TF에 참여('15년~)하고, 국내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추진('19년~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ICAO 개정안 발효 이후 최단시간 내 국내시행을 목표로 ICAO TF 지속참여,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적용방안 마련 예정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30. 인천국제공항 비행편수 증대를 위하여 UIR에 대하여 검토하고 항공로를 개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고도비행정보구역(UIR) 검토 결과 인천공항 비행편수 증대에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</li> <li>○ 인천공항 비행편수 증대를 위해 출도착 비행경로(항공로)를 개선 추진</li> <li>- 인천공항 동쪽 공역 비행절차 개선(트롬본절차 도입)('20.10.8)</li> <li>- 신설된 제4활주로 비행절차 수립('21.6.17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천공항 서쪽 공역의 트롬본 비행절차 도입을 위한 국방부와 공역조정 협의</li> </ul>
항공정책실	231. 항공기 지연 관련 원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통계 관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공기 지연 원인·분류 체계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표준화 완료('22.1.25)</li> <li>- 지연 원인 71개→108개로 세분화</li> <li>- 주요 원인별 6개→9개로 대분류 후 14개 세부 분류체계 마련</li> <li>○ 新지연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지연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항공사·공항공사 시스템 연계 작업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3년 1월부터 新 지연분류체계를 적용한 통계 관리 시스템 정상화 계획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32. 숙련 항공정비사 수급 부족문제 대비를 위해 숙련정비사를 육성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영향으로 '20년부터 정비사 신규 채용자 수가 줄어 숙련 정비사 부족이 우려될 수 있으나,</li> <li>- 고급 정비 훈련과정 확대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숙련 정비사 양성 중</li> </ul>
항공정책실	233. 울진비행훈련원 항공사 조종사 취업연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조종사 인력 양성사업 개선방안 수립('21.6)</li> <li>- 채용정보, 채용준비반, 항공사 맞춤형 과정 등을 개설하여 훈련생 취업 지원 사업 지속 수행</li> </ul>
항공정책실	234. 드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드론실명제 대상을 확대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드론실명제는 산·학·연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* 시행 중 ('21.1~)</li> <li>* ('20.12월까지) 사업용 전부+비사업용 <b>12kg</b> ↑ →('21.1월이후) 사업용 전부+비사업용 <b>2kg</b> ↑</li> <li>- 2kg 이하 비사업용(레저용) 드론으로 실명제 대상 추가확대는 현재 시행중인 드론실명제의 정착 상황 등을 보아 검토할 예정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('23~'32) 수립 시 드론실명제 확대 필요성, 추진 시기 등 검토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35. 공공분야에서 드론 구매 시 국산드론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산드론 구매 비율* 개선을 위해 국산 구매 컨설팅(우리드론 알림-e)을 운영 중이며, 국산드론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 완료('21.12월 재지정)</li> <li>* (공공분야 국산화율) ('18) 15.5% → ('21.3) 47%</li> </ul>
항공정책실	236. 드론사고 발생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드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'21년부터 드론실명제·조종자격 차등화 등을 시행 중이며, 드론 불법비행에 대한 벌칙 신설 및 과태료를 상향하고, 드론 사용자 업체를 전문기관(교통안전공단)이 관리토록 「항공안전법」 개정('21.12)</li> <li>○ 드론 사고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*도 적극 추진 중('22.2~'22.12)</li> <li>* (수행기관) 한국교통안전공단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드론 사고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('23.3~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37. 드론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적정 보험요율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비사업용(개인용)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사업용에만 적용되던 드론 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까지 확대토록 하고, 의무보장 범위도 대인배상에서 대인·대물배상으로 확대토록 「항공사업법」 개정('20.6)</li> <li>○ 드론보험 저변 확대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정부,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드론 보험협의체 구성·발족('22.9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표준약관 제정 논의</li> </ul>
항공정책실	238. 의무보험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드론보험 가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드론 보험이력 및 사고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중('22.2~12)</li> </ul> <p>* (수행기관) 한국교통안전공단</p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드론 보험이력 및 사고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('23.3~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39. 드론사고 건수 등에 관한 통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드론 사고 현황·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 구축·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「드론법」 개정* 추진</li> </ul> <p>* 「드론법」 개정안 발의('22.2.9, 이현승 의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드론 사고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*도 적극 추진 중('22.2~12)</li> </ul> <p>* (수행기관) 한국교통안전공단</p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드론 사고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('23.3~)</li> </ul>
항공정책실	240. 충청권·강원권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 교육 응시수요를 상시 수용할 수 있는 드론 인프라를 구축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 응시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설 실기시험장 16곳을 지정('22.1), 충청권·강원권 내 드론 전문교육기관도 '21.12월 각 11곳·34곳을 지정·운영 중</li> </ul>
항공정책실	241. 협약의 일방적 종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'先선발' 훈련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 항공사에 이들의 고용보장을 권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팬데믹으로 항공업계 채용시장이 동결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, 조종인력양성 협의체 회의('22.3.31)를 통해 先선발 훈련생 지속 관리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42.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기금 운용 기준 조정을 위해 금융위원회, 산업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부는 총차입금 기준 완화를 위해 금융위의 기금 운용지침 개정시 요건 완화(5,000억원→3,000억원)를 건의하였으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위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이 항공·해운 등 총 9개 업종에 해당되는 만큼 요건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계 요청 시 금융당국과 개선방안 협의 추진</li> </ul>
항공정책실	243. 기간산업과 기간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출 지원 금리를 재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안기금의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, 공적자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계는 유상증자·전환사채발행 등 자구노력 중이며, 자구노력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업계 요청 시 감안하여 금융당국과 개선방안 협의 추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44.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항공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공항버스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공사,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'22.12월말까지 연장('22.6)</li> <li>○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('22.4.6) 및 조기 정상화('22.6.8) 추진</li> <li>○ 버스기사 특별지원('22년 1차 150만원, 2차 300만원), 특별고용업종 지원기간 연장('22.3)</li> </ul>
항공정책실	245. 대구경북 신공항 접근교통망을 개항시기에 맞게 조기 구축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추어 접근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도로·철도망 계획'에 반영</li> <li>* (도로)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('22.1.28) : 북구미~군위 신설, 읍내~군위 확장 (철도) 국가 철도망 계획('21.7.5) : 대구경북 광역철도, 중앙선 복선화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근 교통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구축되도록 노력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46. 국내 항공사 사외이사들이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으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항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·감독 지속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무구조 모니터링 등 항공사 관리·감독</li> </ul>
항공정책실	247. 울릉신공항 공사 중 지이유 및 준공 예정일 준수 여부, 시공사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재 수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, 현재 공사 정상 추진 중</li> <li>-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며 주요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'25년 완공 예정</li> </ul>
항공정책실	248.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구조 다변화를 모색하고, 과잉 면허발급에 대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* 및 증편 규모 제한없이 항공수요에 따른 항공편 공급 추진 조치 발표('22.6.8)</li> <li>*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(20대→40대)과 비행 금지시간(Curfew, 20시~익일 5시) 해제</li> <li>-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5,061억원('20~'22.7월 누계), 기안기금 4,821억원('20~'21) 등 지원</li> <li>○ 고용유지지원금 연장(90일) 완료('22.6월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49. 울산공항 시설개량 및 국제공항 승격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울산공항 비행장시설 위험평가 및 관리대안 연구용역('21.6~12)」을 실시하여 착륙대 기준 개정에 따른 위험재평가 및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추진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변지역 개발, 노선추가 신설 등과 연계하여 수요 급증시 여객터미널 등 시설이 적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검토</li> </ul>
항공정책실	250. 새만금 신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새만금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, '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'로 선정되었음('19.1)</li> <li>-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,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중임</li> </ul>
항공정책실	251.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적기 완공 및 공기 단축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'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'로 선정('19.1)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음</li> <li>-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 완료('22.6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적기 완공 및 공기 단축을 위한 발주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예정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52. 항공업계 대변을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국토교통부의 참여를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공업계 대변을 위해서는 해외입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기구인 ‘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’, ‘코로나19 중대본 회의’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이를 활용</li> <li>○ 상황평가회의(질병청 주재) 및 코로나19 중대본(총리님 주재)을 통해 2차례에 걸쳐 국제선 정상화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’을 마련, 국제선 복원 계획 발표(’22.4.6)</li> <li>- ‘국제선 조기 정상화’ 방안을 마련하여, 인천공항 항공규제(슬롯 및 도착시간 제한) 해제(’22.6.8~)</li> </ul> </li> </ul> <p>* 모든해외입국자(백신접종여부 무관) 입국격리 면제(’22.6.8~)</p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53. 위드코로나 대비 검역 프로세스 구축에 중재 역할을 수행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‘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(Q-code)’ 전면 운영(’22.3.21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국적사, 외항사, 여행사 등 대상 Q코드 활용 안내 독려 간담회 개최(’22.6.10)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(지원인력 배치 지원) 검역은 질병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이나, 질병청에서 Q코드 활용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부에서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, 검역 과부하에 따른 지원인력 필요 요청에 양 공항공사 등을 통해 지원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국제선 정상화와 함께 늘어나는 국제선 여객 대응위하여 양 공항공사 등에서 검역 지원인력 우선 투입* 진행</li> <li>* 대기열 관리, Q코드(신속검역 가능) 안내 등 수행하는 지원인력 74명</li> <li>- 또한 추가 인력소요 대응을 문체부 소관 사업*을 활용, 총 140명을 투입하는 방안을 문체부·지자체와 협의 완료(8.8) 하였으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’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(’22.4~12, 예산 396억원, 시·도 주체)</li> </ul> </li> <li>- 각 공항 검역소별 검역지원인력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8월부터 순차적으로 방역인력 투입·배치 중</li> <li>* 인천 55명, 김포 10명, 제주 16명, 양양 1명 채용 완료(9.22 기준)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54. 공항에 항공특별사법경찰 도입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공특사경을 항공보안감독관에게 부여하고자 법무부·경찰청과 기 협의('21.5월) 하였으나, 경찰청의 부정적인 입장'으로 도입 곤란</li> <li>* 공항경찰대 역할과 중복될 수 있고, 재물손괴·폭행 등은 형법 범죄로 일반경찰 수사 대상</li> </ul>
항공정책실	255. 한국공항공사의 만성적인 국내선 항공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항 인프라 구축 추진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추진내용) 신분 확인 게이트, 셀프 탑승 게이트, 셀프 등록대 증설을 위한 공항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여객처리로 지연 방지 등</li> <li>* '21년 증설 완료 사항 : 신분확인 게이트(23식), 셀프 탑승 게이트(10식), 셀프 등록대(22식)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항 인프라 구축 추진 계속</li> <li>- (추진계획) 신분확인 게이트, 셀프 탑승 게이트, 셀프 등록대 추가 증설</li> </ul>
항공정책실	256. 송환대기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송환대기실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('22.8) 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법무부·기재부 등과 협의 추진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기년도 적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57. 2021년 7월 5일 김포 공항에 착륙시도한 제주항공 211편 사건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활주로 오접근·오착륙 시 조치사항과 관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「항공교통 관제절차」(국토교통부 고시) 개정완료('21.8)</li> <li>- 항공사 안전감독 강화 및 항공사 사례 전파 및 교육('21.11)</li> <li>- 활주로 오접근 방지 관제분야 안전대책* 지속 시행중</li> <li>* 최종접근구간에 있는 항공기 감시시스템 범위 조정 및 경보기능 개선, 관제사 실무기량 유지·훈련 강화,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 계기정밀접근(ILS) 신호 차단 등</li> </ul>
항공정책실	258. 공항 사용료를 현실화하고, 공항공사의 민영항공사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공수요 회복현황과 양공항공사·업계 재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항 사용료에 관한 감면 및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</li> <li>*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한 공항 사용료 등 감면이 '22.12월말 종료예정</li> </ul>

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59.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 지연 개선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現 지연기준을 국제통용기준으로 변경 위한 회의 개최 및 진행상황 점검(5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·국제(30~60분)→게이트 출·도착(15분)</li> </ul> </li> <li>* 지연기준·사유 반영한 시스템·통계 기준 개편 등</li> <li>○ 항공정보시스템(FOIS)과 연계된 공사·항공사의 시스템별 개선작업 진행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시스템은 연계 통합('22.12월말 예정) 하고, 기관별 프로그램 연계·검증 추진</li> <li>* 시스템 간 호환 및 통계자료 검증 절차 진행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新시스템 및 통계 기준 적용예정('23.1.1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60. LCC 산업구조 재편을 검토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LCC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선 조기 정상화 및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* 및 증편규모 제한없이 항공수요에 따른 항공편 공급 추진 조치 발표('22.6.8)</li> <li>*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(20대→40대)과 비행 금지시간(Curfew, 20시~익일 5시) 해제</li> </ul> </li> <li>-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5,061억원('20~'22.7월 누계), 기반기금 4,821억원('20~'21) 등 지원</li> <li>- 고용유지지원금 연장(90일) 완료('22.6월)</li> </ul> <p><b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LCC 회복추세를 보아가며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은 신중히 검토</li> </ul>
항공정책실	261. LCC 항공사의 정비사 확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	<p><b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공기 신규등록 시와 연·월간 항공 안전감독 활동을 통해 항공사 정비인력 확보상태를 상시 확인 중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62. 상임감사 전문성 및 적정성,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등 낙하산 문제에 대한 감사를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관 임원은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공사 정관 등 관계규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 후 선임하고 있음</li> </ul> <p>* 상임감사위원 임명절차 : 임추위 구성 → 공모 → 서류·면접심사 및 후보자 추천(5배수) → 공운위의결 → 주총 → 기재부장관 제청 및 대통령 임명</p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선임 과정 모니터링</li> </ul>
항공정책실	263. 인천공항 재무건전성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수익 증대 방안 검토 및 현물출자 추진 등</li> <li>-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수요 감소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 등으로 악화된 공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물출자 완료('22.8) ('21년 403억원, '22년 425억원 출자완료)</li> </ul> <p>* (절차) 출자신청(공사) → 의견서 제출(국토부) → 계획서 작성(기재부) →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</p>
항공정책실	264. 대형 국적항공사 통합 관련, 항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정위와 경쟁제한노선 축소 및 슬롯·운수권 반납 등 구조적 조치 이전에는 행태적 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협의,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 ('22.2.22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도로국	265. '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'을 적기 수립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('21~'25)' 수립·고시('22.2)</li> </ul>
도로국	266. 고속도로 개방형 IC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속도로 폐쇄식 IC 진출입로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구축('21.10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방식IC 구간(3개소) 교통정보 수집용 노변기지국(RSE) 시범설치(~'22.12)</li> <li>○ 시범설치 구간 진출입 교통량 표출 시스템 개발(~'22.12)</li> </ul>
도로국	267. 한국도로공사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이나 물류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편의시설)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, 공원, 사회적 약자 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('22.9, 29개소)</li> <li>○ (물류시설) 기흥 IC 인근에 물류시설 구축 시범사업 추진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편의시설) 추가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 발굴·추진 중(계속)</li> <li>○ (물류시설)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지 발굴 추진(계속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도로국	268. 사실상도로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기관 회의('21.11)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 파악, 해당 지자체가 도로 유형' 조사 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조치('21.12)</li> <li>* 건축법상 도로(75~80%), 도시계획도로(10~15%), 사도법상 사도(3% 내외)</li> </ul>
도로국	269.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대해 도로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도로등급 조정의 주기, 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* 시행 중</li> <li>* 도로 노선의 지정 등 개선방안 연구('21.9~'22.12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로법 일부개정안'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조치</li> <li>*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('21.10.20) :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또는 수시로 노선 지정·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로등급을 조정</li> </ul>
도로국	270. 일반국도의 야간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명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명시설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야간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, 설치 효과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* 시행 중</li> <li>* 도로안전시설(조명시설) 설치·관리지침 연구(~'23.8) 고속도로 가로등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(~'22.10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침 개정 등 검토(~'23.12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도로국	271. 일반국도 신규사업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추진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규 일반국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시행</li> <li>* '22년 국도사업 현안점검회의 개최(1.19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국도 신규사업이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관리 이행(계속)</li> </ul>
도로국	272. 호남고속도로 지선 중 서대전JCT~회덕JCT 구간의 확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'에 반영 완료('22.2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반영 사업의 경제성,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절차 착수</li> </ul>
도로국	273. 도로포장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체선정 평가방식 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점검회의 실시('21.11)</li> <li>○ 신규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'22년도 포장사업 발주('22.4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도로국	274. 민자고속도로 정부지원 방식에 대해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지원이 필요한 MRG(최소운영수입보장) 대상 8개 노선 중 7개 노선 MRG 해소</li> <li>* 인천대교는 협약에 따라 '24년 이후 종료 예정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행료 수준, 물가·금리 등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축소 노력 지속</li> </ul>
도로국	275. 국도 위 낙하물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바일 앱(도로불편신고체계)을 활용하여 도로이용자가 낙하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개선(~'21.12)</li> <li>○ 도로안전지킴이 서비스*를 통해 낙하물 처리 및 통계작성 등 체계적 관리 중('21.1~)</li> <li>* 보수 및 작업 정보를 수집, 신속하게 공유 및 관리하는 현장작업 업무 서비스</li> <li>○ 적재불량 단속 및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홍보 등을 실시(계속)</li> </ul>
도로국	276. 국도 건설공사 준공 이후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국토청 등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개 지방국토청에 국도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관리 철저 지시하고 관리</li> <li>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설물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정, 기간 내 검사 실시 및 하자 발견시 건설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시행</li> <li>* 도로건설과-3454호(2021.11.9.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도로국	277. 명절 통행료 감면 등 공익서비스(PSO) 비용을 보전하지 않아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부채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행료 감면금액 보전을 위한 PSO 예산을 지속 요구 중(2011~)이나, 재정여건 부족으로 미반영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행료 감면금액 보전에 필요한 PSO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</li> </ul>
철도국	278. 철도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방안*을 검토하고, 관계기관(SR, 코레일) 협의 진행 중</li> <li>* 중정비 중인 SRT 1편성 정비를 완료하여 수서~익산~여수EXPO 구간 운행</li> </ul>
철도국	279. 친환경 수송수단인 철도물류의 역할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('21.10~) 추진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기관 협의 및 철도산업위원회 상정</li> </ul>
철도국	280. 철도공사가 SR에 임대한 철도차량의 임대요율을 사법기관 판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후 사법기관의 판단결과를 고려해 기관 간 협의토록 추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281. 한국철도공사 부채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도공사의 재무전망, 부채관리 등을 위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('22-'26) 수립</li> </ul>
철도국	282. 낙후된 호남의 지역발전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타면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,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토</li> <li>- 다만, 예타면제 논의에 앞서 사업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,</li> <li>-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('21.12~)를 통해, 본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</li> </ul>
철도국	283.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대구~광주 달빛고속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타면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,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토</li> <li>- 다만, 예타면제 논의에 앞서 사업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,</li> <li>-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('21.12~)를 통해, 본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</li> </ul> <p>* 김상훈-조오섭 의원실 서면질의 답변완료('21.10, '22.5)</p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284.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균형발전 도모 및 주택수요 분산, 탄소중립(저감), 그린 뉴딜 실천, 경기 동남권 신도시 개발을 위해 GTX-A의 광주, 이천, 여주, 원주 연결을 위한 GTX-A 수서역 접속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GTX-A 삼성~동탄구간 내 수서역 접속부를 설치할 경우 설계변경 및 터널확폭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*되어 본선 개통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,</li> <li>* 기본·실시설계 및 사업실시계획 변경(약12개월), 확폭터널 공사(약 12개월)</li> <li>- 수서~광주 사업도 연결선 반영 시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타당성재조사로 인한 사업지연(1~2년), 사업추진 불투명 등이 예상됨에 따라, GTX-A 수광선 접속부 설치 추진 곤란</li> <li>* 김교홍-소병훈-허영 의원실 서면질의 답변완료('21.10)</li> </ul>
철도국	285. GTX-A와 SRT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평택 지제역에 차량기지 건설 및 SR 본사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평택 지제역 차량기지 건설) 신규 차량기지의 필요성 및 기초자료 검토 등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* 추진</li> <li>* (시행기관) 국가철도공단 / (기간) '21.12~'22.10</li> <li>○ (SR 본사 이전) 평택지제역으로 SR 본사 이전 계획 검토 중</li> <li>* 평택 지제역 차량기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본사 이전방안 검토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평택 지제역 차량기지 건설)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,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시행 예정</li> <li>○ (SR 본사 이전) SR 평택시 등 관계기관 협의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286. 국토교통부 철도통합 안전망(LTE-R)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망 간 전파간섭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·시행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도통합무선망(LTE-R)과 재난안전망(PS-LTE) 간 기지국 최적화*를 통해 원강선, 전라선, 군장산단인입철도 총 17개소에 대하여 전파간섭 해소('22.5.20)</li> <li>* (기지국 최적화) 안테나 이설 및 출력조정, 안테나 방향조정 등을 통하여 전파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적 조치 시행 완료</li> <li>- 향후 구축되는 철도통합무선망 사업 노선도 기지국 최적화 및 양방향 기지국 공유* 등을 통해 전파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 계획</li> <li>* (양방향 기지국 공유) 상대방 기지국을 상호 공유 및 이용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</li> </ul>
철도국	287. 경부선 송탄역의 북쪽 출입구 추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입구 추가설치 관련 관계기관(국토교통부, 평택시, 철도공사) 협의('22.3월)</li> <li>-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 추진</li> <li>*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검토 시행(평택시, ~'22.8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송탄역 추가 출입구 설치 방안 협의('22.9월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288. 경부선 금천구청역 보도육교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육교개량(EV 2대 설치) 계획 수립</li> <li>- 실시설계 착수('22.하반기)</li> <li>- 공사착공 및 준공('23.12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계획(철도공사 수립 중)에 연결통로 확장방안도 포함 검토</li> </ul>
철도국	289. 청량리역 정비창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시에서 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는 용역이므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,</li> <li>* 서울시와 용역 추진방안 협의('21.11)</li> <li>- 서울시에서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도시개발을 검토 시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조 예정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290.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시설관리업무가 유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‘철도시설 유지보수 장비 현대화 계획’에 따라 선로점검차 등 4종 24대의 최첨단 현대화 유지보수 장비 도입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장비현대화) 선로점검차 2대, 소형다짐장비 20대, 고압살수차 1대, 레일밀링차 1대</li> <li>** (인력효율화, 408명) 기재부 예산 심의 시 선로점검차 및 소형다짐장비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 인력 감 조정('21년 △66명, '22년 △118명, '23년 △160명, '24년 △64명)</li> </ul> </li> <li>- 또한, 인력에 의한 시설점검을 줄여 사고 감소 등 안전을 강화하고, 검측 신속·정밀도 향상 등을 위한 영업열차 차상검측 시스템 구축 확정('22.4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차상검측시스템) 영업열차에 무인자동검측 시스템을 구현, 안전·신속·정밀도 향상 도모 (새마을 1대, 전동차 3대)</li> </ul> </li> <li>○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초 유지보수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말 유지보수 성과평가 시행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울러,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에 따라, 철도시설의 노후도 뿐만 아니라 안전성·내구성·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모든 철도시설물에 정밀진단·성능평가 시행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291. 민자철도의 체계적인 종합 관리 대책 및 법적 분쟁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자철도 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‘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’ 설립 추진(「철도사업법」 개정 중)</li> <li>○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, 운영평가 방안, 관리지원센터 역할 마련 등을 위해 연구용역 완료('21.6~'22.6)</li> <li>○ ‘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’ 예비지정 (한국교통연구원, '22.6.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’ 본 지정 (「철도사업법」 시행 시)</li> <li>○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평가(매년) 추진(「철도사업법」 시행 시)</li> </ul>
철도국	292. 부전~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 관련 철저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목학회 사고원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('21.5~'22.6월)로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이현승 위원장, 정동만·김정호의원실 보고 완료('22.4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고 관련 시공사 및 감리단 등 부실별점 부과 요청('22.5.31, 부산국토청)</li> </ul> </li> </ul>
철도국	293.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교통공사 운영적자 및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철도 무임승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('22.3~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철도 무임승수 개선방안 마련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294. 철도기관실 내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제외하는 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을 모법의 취지에 맞게 재개정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열차기관실 내 영상기록장치 훼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반대하는 철도 노조와 설치 필요성 및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,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</li> <li>- 한국철도공사에는 영상기록장치 훼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지시 공문('22.6.7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도기관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 재개정(면제조항 삭제) 추진</li> </ul>
철도국	295. 태화강역~송정역(북울산역) 광역철도 연장 정상개통 또는 조기개통을 위해 신속한 차량제작을 촉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태화강~송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확정·고시('22.9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5년 개통 목표로 설계 착수('22.下) 예정이며 철도공사를 통해 차량제작 추진</li> </ul>
철도국	296. 코로나19로 인한 철도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국가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수송, 명절 창측발매 제한에 따른 철도운영사의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'23년도 PSO보상 예산(정부안: 29,348백만원) 반영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감사관실	297.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불공정·불평등 채용비리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차례 전수조사 완료 및 제5차 조사 진행 중</li> <li>* 4차 조사까지 행정조치(212건) 및 신분조치(349건)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진행(~'22.10.)</li> <li>- 산하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행정조치 등 실시 예정</li> <li>*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('22. 2.~10.), 43개 기관 대상</li> </ul>

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감사관실	298. 국토교통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도덕불감증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·전파('21.2.23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'22년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에 전파</li> </ul> </li> <li>*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엄수,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공직사회 신뢰제고</li> <li>○ 취약시기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명절('22.1.24.~2.4.), 선거철('22.3.2.~3.8, 5.23.~5.31.), 을지연습기간('22.8.16~8.26.), 추석명절('22.9.1.~9.8.) 소속·산하 기관 대상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</li> <li>* 복무관리 실태, 정권교체기 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행태, 정치적 중립위반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지속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선거기간, 휴가철, 추석,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집중점검</li> <li>*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는 엄중조치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운영지원과	299.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외부전문가의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보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수한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기존 공모형 직위* → 개방형 직위로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권oo('22.1)</li> </ul> </li> <li>○ 신규모집 직위* 홈페이지 공고 및 공공기관 공문발송 등 홍보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인천항공관제소장, 국토위성센터장('22.5)</li> </ul> </li> </ul>
감사관실	300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계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국토교통부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5급을 받았고, 소속기관의 경우에도 하위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,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청렴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권익위의 '청렴 컨설팅'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부 청렴도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규명을 위해 맞춤형 진단추진(22.1.~)</li> <li>○ 2022년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('22.5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사전차단, 청렴도 제고와 갑질문화 개선에 공감대 형성, 청렴교육 및 투명성 강화, 청렴의지 선포 및 홍보 강화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단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렴교육 및 예방활동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추진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감사관실	301. 국무조정실이 적발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첩한 비위 사실 중 성희롱 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성희롱 피해입증을 위해 2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나, 피해자측의 면담 거부와 증거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사 중단</li> <li>- 1차 조사('21.3.30.~4.2.) 과정에서 피해자의 면담 거부에 따라 조사가 중단되었고, 2차 조사('21.4.7.~4.8.) 과정에서도 피해자와의 연락 불가, 객관적 증거(모바일, CCTV 기록 등) 미확보에 따라 조사 중단</li> </ul> <p>* 다만, 피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자는 조사 후 즉시 전보조치('21.4.12.)</p>
운영지원과	302.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 국토부 여성관리자 임용실적을 제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2.6. 기준 본부 과장급 여성관리자는 13명으로, 전년 대비 1명 추가임용 완료</li> <li>- 향후 직무능력이 우수한 여성관리자 풀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</li> </ul>
공공주택 추진단	303.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등을 위해 민·관·공 협의체 구성</li> <li>- 주민들과의 정기적으로 의사소통 및 현안사항 등 논의</li> </ul> <p>* (협의체) 국토부, 광명·시흥 주민대책위원회, 경기도, 광명시, 시흥시, 한국토지주택공사</p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공공주택 추진단	304. 투기방지를 위한 전매제한 특례 폐지의 취지는 좋으나, 전매가 가능하다는 기대하에 협의 양도한 경우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공고 시 전매행위 제한 규정 등 전매 관련 유의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안내 중 (인천가정2, '22.6.7.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향후 공고시에도 전매 관련 유의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안내 예정</li> </ul>
공공주택 추진단	305. 울산태화강변지구조성으로 태화강 수변공원 인근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울산태화강변 지구 북측에 완충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 반영('20.12)</li> <li>- 태화강변과 연결한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북측에 생태계 보전 및 지구내 공동주택과의 완충을 위해 폭 50m 규모의 근린공원 조성 추진</li> </ul> <p>* 근린공원 개요 : 폭 50M, 면적 21,955㎡</p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린공원 조성완료('24.3)</li> <li>- 지구 준공('24.3) 시기에 맞춰 근린공원 완료 예정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공공주택 추진단	306. 세종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광역철도 사업비 일부를 국고에서 투자하는 방안 에 대해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종조치원 및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등 사전절차 추진 중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구지정 완료('22.下) 이후,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역교통대책 검토 예정</li> </ul>
공공주택 추진단	307. 장현·목감 공공주택지구 인근 장현물왕교차로의 입체화 및 관내 연결로 등에 대한 적극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현·물왕교차로 입체화 및 관내 연결로 등에 대한 적극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협의사항) 광명시흥지구 등 주변개발 사업을 고려한 교통수요 재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('21.12)</li> <li>- (분석결과)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 시행중('19.3~'23.8)이며, 장현·물왕교차로 분석결과 서비스수준 C, D로 평면교차로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('22.3)</li> <li>- (추진현황) 분석결과 지자체 송부('22.4) 및 현재 지자체에서 분석결과 검토 중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2.하 : 광역교통개선대책 분석 결과에 따라 교차로형식 관계기관 협의</li> <li>○ '23. :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등 도로 인·허가 추진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공공주택 추진단	308. 동자동 쪽방촌 정비 사업에 대해 민간재개발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완 제출된 민간개발안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 및 검토('22.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정('22.6.20)된 기준으로 민간개발안 재검토 요청(서울시, '22.7)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계획(안) 접수 시,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공공성·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방식 결정</li> </ul>
공공주택 추진단	309.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사업 용자규모 확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 집행현황·수요를 감안하여 대폭 증액('22.8 정부안 반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22년 2,675억원 → '23년 4,496억원</li> </ul> </li> <li>○ 민간재원 활용 시 이차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신설('22.8 정부안 반영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자구조 개선 예정('22.12)</li> </ul>
공공주택 추진단	310. 명확한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통계를 관리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빈집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기준, 방법 등을 규정한 「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」 마련('22.17. 제정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별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수집·관리 중인 빈집 정보에 대하여 통일된 정보 수집·관리 방안 마련('23.下)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공공주택 추진단	311.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에 노력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후보지 간담회* 등 후보지 관리 및 의원실 협의 등 국회 통과 노력</li> <li>* 서울강서('21.11.23), 진성준 의원실('22.1.6), 의왕내손('22.3.18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회 법안 검토 시 지원을 지속하고 후보지에 법안 계류 상황 설명</li> </ul>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2.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내용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여 발표</li> <li>* 120대 국정과제(7.26): (약속22-116번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균형발전 총괄기관, 지자체, 관계부처 등과 추진방향 협의</li> </ul>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3. 혁신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기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혁신도시 건설·조성 시에 진입도로(6,590억원) 및 상수도시설(490억원) 설치 비용 국고 보조</li> <li>* 건설 준공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주체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부는 「'22년도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용역(4~12월)」을 통해 지원 강화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4. 울산혁신도시 주변 홍수 피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운2지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자체 협의('21.10)</li> <li>*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설치('21.4), 유곡·약사·장현저류지 보완공사('22.8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운2지구 재해영양평가 변경이행계획서 행안부 제출('23.6)</li> </ul>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5.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전 비대상 공공기관이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종전부지 매입 처리</li> <li>○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시 지방이전 취지를 살려 매각·활용토록 소관부처 협의 강화</li> </ul>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6. 공공기관 투자·출자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내용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여 발표</li> <li>* 120대 국정과제(7.26): (약속22-116번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균형발전 총괄기관, 지자체, 관계부처 등과 추진방향 협의</li> <li>* 이전대상 기관 시·도별 배치 등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 필요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7.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광역화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개선 방 안을 검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이 특정 대학에 편중되는 문제 등 해소를 위해 지자체간 합의를 통해 채용범위 광역화를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광주·전남('16), 대구·경북('16), 대전·세종·충청('20), 울산·경남('22.1월) 광역화 완료</li> <li>* (未 광역화) 전북, 부산, 제주, 강원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(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) 추진</li> </ul>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8.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 공기관의 이전 계획 을 구체화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상청 지방이전계획 승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균형위 심의('21.10.13), 이전계획 승인('21.10.28), 기상청 1차이전('21.12~'22.2)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전 이전 3개 기관 이전계획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자체 의견과 부처 검토·조정, 균형위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 승인 추진</li> <li>* 특허전략개발원('22.9월), 임업진흥원('22.12월), 기상산업기술원('22.12월)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9. 혁신도시 이전공공기 관의 수도권 통근버 스 운영을 축소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주여건 활성화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 통근버스 지속 감축 관리 강화</li> <li>* 통근버스 운영 현황 : '21.6월말 282대 → '22.6월말 217대(△65)</li> </ul>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20.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 파트가 투기에 악용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1년에 도입된 혁신도시 특공제도 既 폐지('19.12)</li> </ul>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321. 서울지하철 5호선 김 포·건단 연장 관련, 지자체 간 이견 조정 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관련기관 (대광위, 서울시, 경기도, 인천시)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의 중('21.7~)</li> <li>* 현재 김포시에서 노선합의를 위한 용역 추진중('21.11~'23.2, 인천시 참여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(인천시, 서울시, 경기도) 간 합의를 통해 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322.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·시행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도시권의 범위 조정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중</li> <li>*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('21.5~'22.9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역교통법 개정 추진</li> </ul>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323. 신도시 등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교통 수단인 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트램 등 교통시설에 대한 편익·비용 등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중</li> <li>*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 완료('22.9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에타지침(기재부) 개정을 위해 적극 협의 추진('22.하반기, 기재부)</li> </ul>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324.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사업 관련 서울시·인천시 간 비용분담 이견에 대해 적극 중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결사업 사업비(총 401억원 중 지방비 240, 운영비 年88억) 분담방안에 대한 서울시·인천시 간 이견* 해소를 위해 대광위 주관 중재** 적극 추진 중</li> <li>* (서울) 지방비·운영비 일부 인천시 분담 필요 (인천) 지방비 일부수용, 운영비 분담 수용근란</li> <li>** 쫓서울·인천 3자 협의('21년 10.14, 10.27, 12.29 / '22년 3.10) 위원장 면담(인천시장 '22.7.12, 서울시장 '22.8.12) 배준영 의원 주재 서울·인천·대광위 실무회의('22.8.24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시·인천시 간 중재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 지원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325.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실적 등을 매 반기마다 실시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행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할 계획</li> </ul>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326.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 구축이 필요한 지자체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BRT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·시행할 것	<p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BRT 등 대중교통과 도로사업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</li> <li>* (연구용역) 대중교통중심 광역 간선도로망 구축연구('21.7.~'22.10, 한국교통연)</li> </ul> <p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역결과를 토대로 BRT 등 대중교통 중심 광역 간선도로망 구축방안 마련·시행</li> </ul>

